기출 PICK

정답과 해설

정치

01 정치와 정치 생활

개념 확인 문제 5쪽

001 정치 002 좁은 의미 003 질서 004 정치 사회화
005 정치적 무관심 006 국가(정부) 007 집단 현상설
008 국가 현상설 009 경제 010 정치적 무관심

난이도별 필수 기출 5~7쪽

011 ⑤ 012 ③ 013 ② 014 (가) 넓은, (나) 좁은
015 ⑤ 016 ⑤ 017 ③ 018 해설 참조 019 ⑤
020 ⑤ 021 ⑤ 022 해설 참조 023 ⑤ 024 ④
025 ③

011 ⑤ 정치는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경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바로알기 | ① 정치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② 학급 규칙 제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된다. ③ 가족회의는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④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한다.

012 ㄷ, ㄹ. 아파트 주민 자치회의 자치 규약 제정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닌 사회 집단 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ㄱ, ㄴ. 입법부의 법률 제정 활동과 국회 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획득 및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이면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도 해당한다.

013 (가)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바로알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치라고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의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만이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014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까지 정치로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한다.

✓ 개념 보충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	•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관련 국가의 고유 활동 • 국가 현상설과 관련됨 • 국가 수준의 전형적인 정치 현상 설명에 적합함 •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이 어려움
넓은 의미의 정치	•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모든 과정 • 집단 현상설과 관련됨 •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 설명에 적합함 • 국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함

015 갑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①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는 국가 현상설과 관련이 있다. ②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기관의 활동과 국가 권력의 작용을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한다. ③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전제로 정치를 이해하므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을 구별하여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⑤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 개념 보충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

국가 현상설	• 정치를 국가 고유의 활동으로 한정함 •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임 •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과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집단 현상설	• 정치 현상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함 •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 국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함

016 을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ㄷ.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합리적 조정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ㄹ.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모두 정치로 보기 때문에, 이들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무 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ㄴ.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017

넓은 의미의 정치만 '예'라고 답변할 질문이 들어가야 함

질문	A	B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좁은 의미의 정치 (가)	아니요	예
(나)	㉠	㉡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과 갈등 조정 활동까지 정치에 포함하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보다 정치 주체의 범위를 넓게 본다. ㄷ. (가)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아니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국가 기관의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서 정치에 해당한다. ㄹ. (나)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경우,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활동에 한정하여 정치를 이해하므로 ㉠은 '아니요'가 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은 '예'가 된다.

018 **모범 답안** 최저 임금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점은 정치가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019 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는 정치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 정치의 기능과 관련된 진술이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020 ⑤ 제시된 사례는 모두 정치적 의사 결정의 결과가 정책이나 법률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사회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021 ⑤ 정부는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다. 정치는 이와 같이 각종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022 **모범 답안**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치 외의 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 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정치 현상에 대한 실망,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023 ⑤ ○○군은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선정된 과제를 법령 개정 건의 및 자치 법규 개정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정치과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주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견은 자치 법규에도 반영될 수 있다. ③ 주민은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 자치 차원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024 ㄱ, ㄴ. 군민의 참여가 저조하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권력층이나 특정 집단의 의견만 반영되어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군민의 참여가 저조하면 의견 수렴과 조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025 (1) 경제 정책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옳은 답은 '○'이다. (2) 공공시설은 지역 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옳은 답은 '○'이다. (3)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옳은 답은 '○'이다. (4)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 권력층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옳은 답은 '×'이다. ③ 학생은 (2), (3)번에 옳은 답안을 작성하였으므로, 학생이 얻은 점수는 2점이다.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다양한 모델

개념 확인 문제 10쪽

026 민주주의 027 인간의 존엄성 028 평등 029 직접
030 숙의 민주주의 031 생활 원리 032 국민 주권의 원리
033 실질적 평등 034 참여 민주주의 035 전자 민주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15쪽

036 ② 037 ② 038 ② 039 ① 040 ④
041 ④ 042 해설 참조 043 ⑤ 044 ④ 045 ①
046 해설 참조 047 ④ 048 ④ 049 ② 050 ⑤
051 ⑤ 052 해설 참조 053 ③ 054 ⑤ 055 ③
056 참여 민주주의 057 ⑤ 058 ①
059 해설 참조 060 ⑤ 061 ⑤ 062 전자 민주주의
063 ④ 064 ⑤ 065 해설 참조 066 ②

036 ㄱ. 민주주의는 다스리는 사람인 치자(治者)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한 정치 형태이다. ㄷ.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다수의 의사에 따라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바로알기 | ㄴ. 한 사람에 의한 지배는 전제 정치, 소수에 의한 지배는 과두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ㄹ.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 결정 방식이지만, 인권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037 ① 민주주의는 민중(demos)과 지배(kratia)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③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귀족정·군주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④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넘어 생활 원리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바로알기 | ②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한 의사 결정 원리 중 하나이다.

038 ② 시민 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형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이념적 가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바로알기 | 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등장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로 운영되었다. ③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④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가치 체계가 생활 원리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가치 체계에서 생활 원리로까지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⑤ 일상생활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인 ㉢에만 해당한다.

039 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040 ④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수 지배의 원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제도나 입법 과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민주주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② 다수 지배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정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는 다수 지배의 원리이다. 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주권의 원리, 정치적 평등의 원리, 다수 지배의 원리를 모두 실현하고자 한다.

041 A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ㄱ, ㄴ, ㄷ.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ㄹ. 국가나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 중 자유에 해당한다.

042 **모범 답안**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도 중시하게 되었다.

043 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소극적 자유는 국가를 비롯한 외부의 간섭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①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으로, 이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②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소극적 자유의 예에 해당한다. ③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소극적 자유이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④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044 ④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② 형식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045 (가)는 형식적 평등, (나)는 실질적 평등이다. ㄱ. 형식적 평등은 선거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를 보장하는 선거권처럼 정치적·시민적 권리에서 강조된다. 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로알기 | ㄷ.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ㄹ. 형식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실질적 평등은 결과의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046 **모범 답안** 헌법 제34조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047 ㄱ. 실질적 평등은 상대적·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ㄴ. 실질적 평등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ㄷ.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선천적·후천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질적 평등이 중시되었다.

바로알기 | ㄹ.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의 사례이다.

048 (가)는 인간의 존엄성, (나)는 평등, (다)는 자유에 해당한다. ④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관계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알기 | ② 우리 헌법은 모든 종류의 서로 다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③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자유와 평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049 **바로알기** | ㉡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배타적인 이념이 아니다. 두 이념은 보완적인 관계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개념 보충

민주주의의 이념

구분	의미와 특징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 •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자유	• 개인이 국가나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상태 •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 • 적극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권)
평등	• 모든 사람들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형식적 평등(절대적, 산술적 평등):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실질적 평등(상대적, 비례적 평등):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050 A는 직접 민주주의이다. 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이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정치 형태이다.

바로알기 | 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발생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정치 형태는 시민이 의사 결정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② 직접 민주주의는 인구가 적고 공동체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 운영이 용이하다. ③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④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합한 정치 형태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051 ㄷ. 국민 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제도이다. ㄹ. 국민 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 대표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바로알기 | ㄱ. 국민이 법안의 제안, 토론, 투표 등을 통해 정책과 법률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이다. ㄴ. 국민 투표제는 헌법 개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052 모범 답안 직접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는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성을 갖춘 대표자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053 (가)는 직접 민주주의, (나)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③ 간접 민주주의는 소수의 대표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므로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바로알기 | ①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 자치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이다. ④ 대표자 없이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간접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갖춘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정책 결정의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⑤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참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054 갑국의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 을국의 정치 형태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ㄷ.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므로, 대표자의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직접 민주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ㄹ.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모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 형태이다.
바로알기 | ㄱ. 갑국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 때에만 시행 가능한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이다. 간접 민주주의는 인구 증가와 영토 확대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발전한 정치 형태이다.

055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는 민주주의 모델은 엘리트 민주주의이다. ①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지도자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므로, 시민의 의사와 다르게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②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주로 선거에 한정되므로 시민들이 정치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④ 엘리트 민주주의는 권력이 소수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치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지도자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담당하므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 집단의 권리나 이익이 소외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시민과의 소통으로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소수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056 학교 운영 위원회,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이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057 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ㄷ.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ㄹ.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 정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이 가진 고정된 선호와 의사를 집약하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중시한다.

058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엘리트 민주주의이다. ㄱ.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이러한 정치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ㄴ. 엘리트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의 의사 결정을 중시하면서도 선거를 통한 시민의 통제로 엘리트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엘리트 민주주의는 소수의 전문가가 신속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보다 정치적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ㄹ.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관여하므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데 엘리트 민주주의보다 유리하다.

059 모범 답안 공론 조사, 공론 조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의견을 형성하는 제도로, 소통하면서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숙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060 제시된 글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 모델은 숙의 민주주의이다. ⑤ 숙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본다.
바로알기 | ①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 모델의 특징이다. ② 선거를 통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엘리트 민주주의 모델의 특징이다. ③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엘리트 민주주의 모델의 특징이다. ④ 숙의 민주주의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 간의 숙의 과정을 강조한다.

061 제시된 사례는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공적 의견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⑤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바로알기 | ①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 형성 과정을 중시한다. ②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토론과 숙의에 참여하므로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숙의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숙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의 주체는 일반 시민이다.

062 제시된 자료의 온라인 투표(K-Voting)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063 ④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바로알기 | ① 전자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현대 민주주의 모델이다. ② 전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③ 전자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정보 격차,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있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064 ㄷ.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적적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 체계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ㄹ. 사회 민주주의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도한 세금 부과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바로알기 | ㄱ. 사회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ㄴ.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065

- 사회자: 국립 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관광 수입 확대를 이유로 찬성하는 측과 환경 오염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갑: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전문가와 논의하여 잘 결정할 테니 믿고 기다립시다. → 엘리트 민주주의
- 을: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집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그들이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를 결정 과정에 반영합시다. → 숙의 민주주의
- 병: (가) → 참여 민주주의

모범 답안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66 ① 엘리트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주도하므로, 시민의 의사와 다른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④ 숙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② 엘리트 민주주의는 전문성이 높은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엘리트의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

☑ 개념 보충

다양한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

엘리트 민주주의	•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하는 모델 • 엘리트가 시민의 의사와 다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음
참여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민의 참여로 보완하려는 모델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양성하며, 정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음
숙의 민주주의	• 다양한 사회 문제와 정치적 쟁점에 대해 소통하면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모델 • 숙의 토론을 통해 공공의 합의에 도달하여 사회 갈등을 해결함

03 민주 정치의 발전과 사상적 배경

개념 확인 문제 18쪽

067 남성 068 계몽사상 069 보통 선거 070 사회 계약설
071 자유주의 072 민회 073 국민 주권 074 루소
075 현대적 자유주의 076 전체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8~23쪽

077 ③ 078 ② 079 ④ 080 ⑤ 081 ①
082 ① 083 ④ 084 ② 085 ③
086 해설 참조 087 ① 088 ④ 089 ② 090 ③
091 ① 092 ④ 093 갑: 루소, 을: 로크 094 ①
095 ② 096 ③ 097 ⑤ 098 해설 참조 099 ①
100 ② 101 (가) 자유주의, (나) 공동체주의 102 ①
103 ③ 104 ① 105 해설 참조

077 ㄴ.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대부분의 공직자 임명에 추첨제와 윤번제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직 담당의 기회를 주었다. ㄷ.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노예·외국인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바로알기 | ㄱ. 사회 계약설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ㄹ.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대의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다.

078 (가)는 도편 추방제이다. ㄱ. 도편 추방제는 시민들의 감정적 판단이나 선동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 중우 정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ㄹ. 도편 추방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경쟁자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바로알기 | ㄴ, ㄷ. 도편 추방제는 소수의 대표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079 ㄴ. 천부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로, 초국가적·불가침적 성격의 보편성을 지닌다. ㄹ.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은 불평등한 구체제에 저항하여 시민 혁명을 일으켰으며,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하였다.
바로알기 | ㄱ.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국왕이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여겨져 법 위에 군림하였다. 따라서 법으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었다. ㄷ.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로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은 사회 계약설이다.

080 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확산시켜 근대 민주 정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081 인민 헌장(1838)은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비밀 투표, 하원 의원 재산 자격 폐지, 하원 의원 보수 지급, 균등 선거구 등을 내용으로 한 차티스트 운동의 강령이다.
바로알기 | ① 인민 헌장은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082

(가) 〈영국의 권리 장전(1689)〉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입헌주의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쓰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나) 〈미국 독립 선언문(1776)〉
모든 인간은 …… 창조주에게서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바꾸거나 ……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 천부 인권, → 저항권
(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 → 천부 인권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국가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 국민 주권

ㄱ. 영국의 권리 장전은 법으로 국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입헌주의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ㄴ. 미국 독립 선언문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천부 인권 사상과 자연권 사상이 담겨 있다.
바로알기 | ㄷ. 대중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권 확대와 함께 19~20세기에 발달하였다. ㄹ. 미국 독립 선언문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기존 정부를 바꾸거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권리 장전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083

① 프랑스 인권 선언 제2조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인간의 자연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난다. ③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평등·자연권·국민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시민 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다. ⑤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는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바로알기 | ④ 프랑스 인권 선언은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084

A는 시민 혁명, B는 참정권 확대 운동, (가)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ㄱ. 시민 혁명은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였다. ㄹ.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의 민주 국가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바로알기 | ㄴ. 참정권 확대 운동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한 운동이다. ㄷ. 참정권 확대 운동은 재산을 가진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참정권을 노동자와 여성 등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085

(가)는 국민 자치의 원리,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 (다)는 입헌주의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ㄱ. 국민 자치의 원리는 주권을 지닌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ㄴ.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기고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이다.
바로알기 | ㄷ.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이다.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제는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086

모범 답안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 정치 요소에는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등이 있다.

087

A는 현대 민주 정치, B는 근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① 시민 혁명을 계기로 발전한 근대 민주 정치는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헌주의를 중요한 정치 원리로 한다.
바로알기 | ②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 시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③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 민주 정치의 사상적 토대이며, 현대 민주 정치는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④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시민의 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제가 발달하였다.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 것은 고대 아테네이다. ⑤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고, 근대 민주 정치에서도 재산·성별 등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다. 반면,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088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④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재산·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지만,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바로알기 | ①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를 특징으로 하였지만, 입헌주의 원리는 시민 혁명을 거치며 발전한 근대 민주 정치에서 강조되었다. ②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성별이나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원칙적으로 철폐되었다. ③ 근대 민주 정치는 시민 혁명을 거치며 군주 주권이 아닌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근대 민주 정치에서 확립되었으며, 현대 민주 정치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089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② 근대 민주 정치는 사회 계약설과 천부 인권 사상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시민 혁명을 거치며 발전하였다.
바로알기 | ① 현대 민주 정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시민권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은 '아니요'이다. 또한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지 않았으므로 ㉡은 '아니요'이다. ③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한 반면, 현대 민주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재산과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었다. 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 정치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A에서는 '아니요', B와 C에서는 '예'가 되는 (가)에 해당 진술이 들어갈 수 없다.

090

③ 홉스는 자연 상태를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⑤ 국가 운영 방식으로 대의제를 옹호하고, 국가가 구성 목적에 반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할 경우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로크이다. ②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루소이다. ④ 사회 계약 이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본 사상가는 로크와 루소이다.

091 자연 상태의 문제를 사회 계약을 통해 해결하고, 국가 운영의 기준을 일반 의지와 공공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대 정치사상가는 루소이다. ① 루소는 주권을 일반 의지로 보았으며, 이는 대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④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고 본 근대 정치사상가는 홉스이다. ⑤ 정부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근대 정치사상가는 로크이다.

092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은 각각 로크와 홉스이다. ④ 로크와 홉스는 모두 자연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정치 공동체)를 수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통치자(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한 반면, 홉스는 권력이 절대 군주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로크와 홉스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⑤ 주권은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대표될 수도 없다고 본 것은 루소의 주장이다.

093 사회 불평등으로 자연 상태가 불안정해졌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여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갑은 루소이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고,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을은 로크이다.

094 ㄱ.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강조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보았다. ㄴ. 로크는 국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불가분의 일반 의지라고 보았다. 반면, 로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통치 권한을 신탁(위임)한다고 보았다. ㄹ. 군주 주권론을 바탕으로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095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ㄱ. 로크는 국가 운영 방식으로 간접 민주주의(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ㄹ. 로크와 루소는 모두 주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루소는 개인의 특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치자의 절대 권력 행사를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ㄷ. 로크뿐만 아니라 루소의 주장도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096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③ 홉스와 달리 로크와 루소는 사회 계약 이후에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홉스는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②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공동선의 실현에서 찾는 것은 루소의 주장이다. ④ 질문 (나)에 '국가 성립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는가?'가 들어가면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예'라고 답변하므로, 해당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질문 (다)에 '간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는가?'가 들어가면 홉스와 루소는 '아니요', 로크는 '예'라고 답변하므로, 해당 진술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 개념 보충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구분	내용
홉스	•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이상적 정치 형태: 절대 군주제 • 주권 소재: 군주 주권론
로크	• 자연 상태: 평화롭지만 개인의 권리(생명·자유·재산)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 • 이상적 정치 형태: 간접 민주주의 • 주권 소재: 국민 주권론
루소	•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사유 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발생 • 이상적 정치 형태: 직접 민주주의 • 주권 소재: 국민 주권론

097 제시된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대 정치사상은 공동체주의이다. ⑤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을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로 본다.

바로알기 | ①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자체를 개인에 우선하거나 개인과 불가분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을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 ③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대와 공동선, 시민적 덕목을 더 중시한다. ④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098 **모범 답안** (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나)는 개인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099 (가)는 고전적 자유주의, (나)는 현대적 자유주의이다. ㄱ.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ㄴ. 현대적 자유주의는 산업화 이후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공공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이다. ㄹ.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를 벗어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이다.

100 A는 자유주의, B는 공동체주의이다. ②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소속감과 연대 의식, 시민적 덕목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자유주의는 공공선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③ 공동체주의는 자아가 공동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④ 극단적 이기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공동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 제기된다. ⑤ 공동체가 발전할 때 개인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101 (가)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나)는 개인을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보고,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이다.

개념 보충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 • 개인은 사회에 우선하며, 이성적·독립적인 존재라고 봄
공동체주의	•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 • 공동체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봄

102 ㄱ.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등장한 정치사상이다. 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로 보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ㄷ.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실현과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을 중시한다. ㄹ.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공적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어느 한 입장만 선택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두 사상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03 (가)는 밀, (다)는 롤스의 주장으로 자유주의 견해에 해당한다. (나)는 매킨타이어, (라)는 샌델의 주장으로 공동체주의 견해에 해당한다.

104 (가), (다)에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이, (나), (라)에는 공동체주의 정치사상이 담겨 있다. ㄱ. 자유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에 앞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로 전제한다. 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므로, 국가(공동체)가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ㄹ. 공동체주의는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동선과 미덕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105 **모범 답안** ㉠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억압되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 자유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과 책임감이 약화되어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04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개념 확인 문제 25쪽

106 다수결의 원칙 107 소수 108 타협 109 숙의 110 효능감
111 생활 원리 112 다수결의 원칙 113 숙의 114 비판적 태도
115 관용 정신

난이도별 필수 기출 25~27쪽

116 ③ 117 ④ 118 ⑤ 119 해설 참조 120 ④
121 해설 참조 122 ④ 123 ② 124 ⑤ 125 ④
126 ③ 127 ③

116 ③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생활 원리이다.

117 ㄴ. 다수결의 원칙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적용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ㄹ. 과학적 지식과 가치관의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나 개인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수결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바로알기 | ㄱ. 다수결의 원칙은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ㄷ.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118 ⑤ 밑줄 친 ㉠의 '다수의 의견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판단이 언제나 옳거나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바로알기 | ①은 다수결이 필요한 이유, ④는 다수결의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② 다수결은 비교적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다. ③ 다수결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19 **모범 답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때 동조 압력이 작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을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20 ④ 제시된 글은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교환될 때 민주주의가 활력을 얻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다.

121 **모범 답안** 자료에는 소수 의견 존중, 비판적 태도, 관용 정신 등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가 나타나 있다.

122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는 숙의와 토론이다. ㄱ. 숙의와 토론에 기반한 의사 결정 방식은 특정 의견이 충분한 검토 없이 다수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숙의와 토론은 다수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숙의와 토론은 다수의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ㄹ. 숙의와 토론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타협하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간다.

바로알기 | ㄴ. 숙의와 토론의 목적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려는 과정 자체에 있다.

123 (가)는 책임감 있는 태도, (나)는 관용 정신, (다)는 숙의이다. ㄱ. 책임감 있는 태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ㄹ. 책임감 있는 태도, 관용 정신, 숙의는 모두 오늘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바로알기 | ㄴ. 숙의 과정을 거치면 상호 수용 가능한 집합적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ㄷ. (가)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맞지만, (나)는 관용 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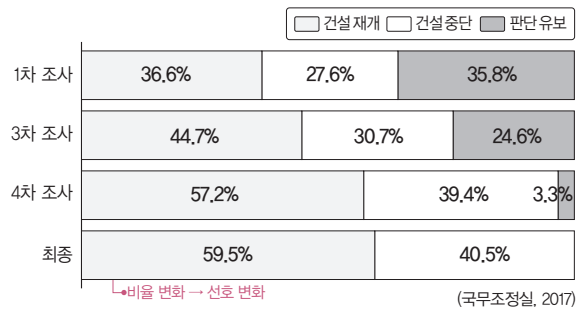
124 ⑤ 제시된 사례에서 병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는 숙의와 토론이다. 특정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원칙만 적용하면 바람직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결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알기 | ①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② 다수결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병은 이미 다수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병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로 볼 수 없다. ③ 관용 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병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로 볼 수 없다. ④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병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로 볼 수 없다.

125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었다. 시민 참여단은 자료 검토, 전문가 설명, 학습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총 네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의 과정



(국무조정실, 2017)

ㄱ. 제시된 사례에서 시민 참여단은 자료 검토, 전문가 설명, 학습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총 네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통해, 설문 사이마다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ㄴ. 그래프를 보면 각 조사별 응답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선호가 학습 및 토론 과정을 거치며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ㄷ.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선호를 취합하는 방식은 여론 조사에 해당한다.

126 ㄷ. 이용자의 권리와 특정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ㄹ. '노 ○○ 존'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근거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자신의 입장만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타협과 합의를 어렵게 하므로, 민주적인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다수의 의견만으로 '노 ○○ 존'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27 (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관용 정신이 필요하다.

바로알기 | (가)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선출된 대표와 협력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개념 보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

다수결의 원칙	•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 소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중우 정치 또는 다수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함
소수 의견 존중	• 다수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대화와 타협	•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 • 대화를 통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타협을 통해 관련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도록 노력해야 함
숙의와 토론	• 특정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며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 • 다수결의 원칙 적용 전에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함
비판적 태도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
관용 정신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	충분한 논의 후에는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을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1~04강 | 28~31쪽

128 ④	129 ③	130 ④	131 ⑤	132 ④
133 ③	134 ⑤	135 ③	136 ①	137 ④
138 ④	139 ⑤	140 ③	141 ②	142 ②
143 ①				

128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④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갑의 관점인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② 을의 관점인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 행사를 정치라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인 넓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갑의 관점인 좁은 의미의 정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⑤ '학급 자치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학급 회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129 ③ 두 사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의 기능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⑤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130 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도입을 두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다.

131 ㉠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은 가치 체계로서의 민주주의, ㉢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ㄴ.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이념으로 확립되었으며,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ㄷ.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 등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생활 원리를 의미한다. ㄹ.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 → 가치 체계 → 생활 원리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바로알기 | ㄱ.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시초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을 뿐, 보통 선거권을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반드시 보통 선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32 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갑은 옳게, 병은 틀리게 설명하였고, 두 번째 질문에는 갑과 을 모두 틀리게 설명하였다. ㄴ.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에 대해 교사는 두 사람만 옳게 설명했다고 하였으므로, 을은 자유에 대해 옳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자유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제시된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관한 학생들의 설명에 대해 교사는 한 사람만 옳게 설명했다고 하였으므로, 병은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므로, 제시된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도 함께 중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33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높이의 발 받침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을, (나)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높이의 발 받침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을 나타낸다. ③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다. ②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다. ④ 우리 헌법은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까지 실현하고자 한다. ⑤ 형식적 평등은 산술적인 평등, 실질적 평등은 비례적인 평등이다.

134

[문항]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옳은 서술 하나당 1점씩, 총 3점)

[답안]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
- (가)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

(가):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들어가야 함

채점 결과	2점

채점 결과가 2점이므로, 제시된 세 가지 답안 중 두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이다. 답안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직접 민주주의(B)의 특징이다. 따라서 B는 직접 민주주의, A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⑤ (가)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이므로, 제시된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지만, 간접 민주주의 또한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②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용이한 정치 형태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③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간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선거로 대표를 선출한다.

✓ 개념 보충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

직접 민주주의	공동체의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간접 민주주의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무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35 A는 참여 민주주의, B는 엘리트 민주주의, C는 숙의 민주주의이다. ㄴ.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주로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담당하므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나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므로, 소통의 주체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참여 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공식적인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위, 집회, 캠페인, 청원 서명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포함한다. ㄹ. 참여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민주주의 모델로 볼 수 있다.

136 (가)는 영국의 권리 장전(1689), (나)는 미국 독립 선언문(1776)이다. ① 영국의 권리 장전은 법으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 ② 미국 독립 선언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하며,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③ 미국 독립 선언문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권리 장전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지만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미국 독립 선언문은 국가 이전부터 인간에게 존재하는 천부 인권을 강조하였다. ⑤ 권리 장전은 영국의 명예 혁명, 독립 선언문은 미국의 독립 혁명의 산물이다.

137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①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어 최고 의결 기구인 민회에서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직접 결정하였다. ②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한다. ③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시민이 직접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민주 정치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근대 민주 정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한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보다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모두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138 ㄱ. 갑이 로크라면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였으므로, '국가가 구성 목적에 반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할 경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갑은 (가)에 '아니요'로 답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ㄴ. 홉스는 로크, 루소와 달리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을이 홉스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홉스는 로크, 루소와 달리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이 홉스라면,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ㄹ.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은 루소만 주장하였다. 그런데 (나)에는 두 정치사상가가 '예'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39 A는 자유주의, B는 공동체주의이다. ㄷ.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선을 중시하므로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ㄹ. (가)에 자유주의는 '아니요', 공동체주의는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공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선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므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와 분리된 이성적·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

140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ㄷ.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중시한다. ㄹ.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각각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강조하지만, 공적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두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알기 | ㄱ.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할 때 개인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ㄴ. 국가가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141 ㄱ, ㄹ. 다수결은 중우 정치나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과학적 지식이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알기 | ㄴ. 다수결은 일반적으로 만장일치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ㄷ. 다수결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수결로 표결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42 ㄱ. (나)는 (가)와 달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종목을 결정하였다. ㄷ. (다)는 (나)와 달리 정보 공유와 숙의의 절차를 거친 뒤 다수결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수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다)는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ㄹ. (가)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최종 결정은 학생회장이 단독으로 내렸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사 결정 사례라고 볼 수 없다.

143 ① ㉠은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사안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는 단계로, 개인의 의견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공적인 의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은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의견을 신속하게 하나로 모으기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의 공청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부의 활동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⑤ ㉣은 공론화 이전의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05 정치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개념 확인 문제 34쪽

144 정치과정 145 환류 146 정치 문화 147 정치 참여
148 정치 효능감 149 산출 150 국가 기관 151 신민형 정치 문화
152 국민 주권의 원리 153 정치적 무관심

난이도별 필수 기출 34~37쪽

154 ②	155 해설 참조	156 ③	157 ③	158 ④
159 ④	160 ③	161 ②	162 ①	163 ④
164 ④	165 해설 참조	166 정치 효능감		167 ⑤
168 ①	169 ⑤	170 ①	171 ④	172 ②
173 ④	174 ④			

154 ㄱ. 정치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 체계에 투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산출되며, 산출된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시 투입으로 이어지는 환류의 과정으로 순환한다. ㄹ. 정치과정은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과정으로, 투입, 산출, 환류의 단계를 포함한다.

바로알기 | ㄴ. 정치과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ㄷ. 정치과정은 대화와 토론 등의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155 모범 답안 산출,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정책 결정 기구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 법률의 형태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므로 산출에 해당한다.

156 ③ (가)에서 ○○ 단체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추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된 것으로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나)에서 국회는 「도로 교통법」을 개정하여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어도 우선 멈추도록 하였다. 이는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산출 단계에 해당한다.

157 (가)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국회, 정부, 법원, 지방 의회 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검토하여 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③ 정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하는 정치 주체로,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158 ㄱ. 전자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에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ㄴ.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산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정치과정에서 환경이란 경제, 문화, 인구, 규범, 국제 사회 등 사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 정세의 변동도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ㄷ. 환류는 산출된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이 평가하고, 새로운 요구가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므로 산출된 정책과 관련이 있다.

✓ 개념 보충

정치과정의 단계

투입	• 의미: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나 지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되는 것 • 사례: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의 정책 건의 활동, 개인의 청원·시위 등
산출	• 의미: 투입된 요구나 지지에 따라 정책 결정 기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것 • 사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환류	• 의미: 산출된 정책이 정치 환경에 영향을 주어 국민이 이를 평가하고, 동시에 국민의 새로운 요구가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사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비판, 정책 수정 요구 등

159 ④ 언론도 정책 평가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환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등의 집단과 더불어 개인도 정치과정의 투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책 결정 기구인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이다. 행정부보다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⑤ 투입, 산출, 환류 과정은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160 ③ 정치과정은 사회 구성원 간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바로알기 | ① 정치과정은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정책 결정의 신속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② 제시된 글은 정치과정의 사회 갈등 조정 및 사회 통합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는 관련이 없다. ④ 정치과정은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며,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정치과정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161 ② 제시된 사례는 과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를 통해 시위·서명 운동·캠페인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사례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강조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시민들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므로, 정치 참여의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사례에는 정책 결정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제시된 사례만으로 정치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162 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은 투입과 환류 단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책 결정 기구가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집단적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② 선거 참여는 개인이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집단적 정치 주체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단적 정치 주체는 투입 단계뿐만 아니라 환류 단계에서도 활동한다. ④ 집단적 정치 주체도 정책 결정 기구에 직접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기관과의 차이는 정책을 직접 결정·집행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있다. ⑤ 집단적 정치 주체는 정책 결정 기구가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163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모두 낮음 → 지방형(향리형) 정치 문화

- A는 구성원 다수가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 B는 구성원들이 정치과정과 정책에 대해 잘 알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는 소극적임 → 신민형 정치 문화
- C는 구성원들이 정치과정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역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 정치에 관심이 높고 참여도 적극적임 → 참여형 정치 문화

ㄱ. 지방형(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로서 구성원들은 스스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ㄴ. 신민형 정치 문화는 정치 체제와 산출 과정에는 민감하지만, 투입 과정에는 둔감한 상태로서 구성원들이 정치과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 ㄷ.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로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의 유형이다.

바로알기 | ㄹ. 전통 사회에 비해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모두 낮은 지방형(향리형) 정치 문화보다는 투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낮지만 산출에는 비교적 높은 인식과 관심을 보이는 신민형 정치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 개념 보충

정치 문화의 유형

구분	의미
지방형(향리형) 정치 문화	• 주로 전통적 사회에서 나타남 • 개인들이 정치과정과 정치적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도 매우 낮음
신민형 정치 문화	• 주로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남 • 개인들이 정치과정과 정치적 제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님
참여형 정치 문화	• 주로 민주적 산업 사회에서 나타남 • 개인들이 정치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다른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64 ①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정치권력의 행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③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면 시민의 정치 효능감이 높아진다. 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감시하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집행을 대행하지는 못한다.

165 **모범 답안**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과정에 전달해야 한다.

166 제시된 대화는 아동 참여 위원회의 정책 제안 중 일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아동 참여 위원들은 자신의 참여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는 정치 효능감이다.

167 ⑤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 참여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변화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포함한다.

바로알기 | ① 정치 효능감은 개인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때 형성되므로 개인의 정치 참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②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치 효능감이 아니라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③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기 어렵다. ④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생각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한다.

168 (가)는 선거 참여이고, (나)는 정당 가입 및 활동이다. ㄱ.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ㄴ. 정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당원 투표는 해당 정당에 가입한 당원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당 구성원의 자격을 전제로 한다.

바로알기 | ㄷ. 선거 참여와 정당 가입 및 활동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하나가 더 중시된다고 볼 수 없다. ㄹ.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더라도 선거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169 ⑤ (가)는 시민 단체, (나)는 정당, (다)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이는 모두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 참여 활동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시민 단체라는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②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는 인터넷을 활용하므로 정치 참여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③ 시민 단체와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는 모두 시민의 요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정당 활동과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는 모두 자신의 의견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70 ① 제시된 글은 낮은 정치 참여와 관심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공직자의 예산 유용과 특혜 향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약화시켜 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제시된 글은 정치적 의사 결정의 신속성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제시된 글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나 그 방식이 아닌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 ⑤ 제시된 글은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참여가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가 민주 정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171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감소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그 결과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수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면 정치 참여가 감소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의 간섭이 약화될 것이다.

172 ㄱ. 갑과 을은 각각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갑과 을에게는 정치적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ㄹ. 병과 정은 혈연이나 개인적 이해관계 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로 볼 수 없다.
바로알기 | ㄴ. 갑은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난 반면, 을은 정치보다 경제 활동에 몰두하여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났다. ㄷ. 병과 정은 투표를 통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173 ㄴ. 공동 대표단은 시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하였다. ㄹ. 공동 대표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시민 단체는 정권 획득이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시민 단체의 활동은 공익 실현과 사회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한다.

174 ④ 제시된 사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조례 제정 요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사례의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특정 개인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이다. ② 제시된 사례는 시민들의 조례 제정 운동에 관한 것으로, 이익 집단보다 시민 단체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시된 사례는 시민들의 요구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제시된 사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무분별한 대중의 정치 참여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정당과 정치 참여 방법

개념 확인 문제 40쪽

175 정책 176 일당 체제 177 다당제 178 이익 집단
179 언론 180 정당 181 양당제 182 공무 담임권
183 이익 집단 184 시민 단체

난이도별 필수 기출 40~45쪽

185 ④ 186 ③ 187 해설 참조 188 ③
189 복수 정당 체제 190 ③ 191 ⑤
192 해설 참조 193 ② 194 ① 195 ① 196 ①
197 ⑤ 198 ⑤ 199 ② 200 ⑤
201 해설 참조 202 ⑤ 203 ③ 204 ⑤ 205 ③
206 ③ 207 ④ 208 ② 209 ③ 210 ④
211 ④ 212 ① 213 ④ 214 ② 215 ③
216 ②

185 밑줄 친 '이 집단'은 정당이다. ㄱ.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천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한다. ㄴ.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공약을 개발하고, 그 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ㄹ.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바로알기 | ㄷ. 정당은 특수 이익 실현이 아닌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186 제시된 일정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활동을 매개한다.
바로알기 | 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 아니다. ②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④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치 참여 집단이 아니다. ⑤ 정당은 정책 결정 기관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187 모범 답안 여당은 의회와 정부를 연결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지원하고,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188 ③ 정당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는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지만,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② 정당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④ 정당은 공직을 담당할 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⑤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익 집약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189 (가)는 복수 정당 체제이다. 복수 정당 체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각 정당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복수 정당 체제에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존재하므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및 활동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다.

190 ③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은 다당제에서 넓고 양당제에서 좁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양당제에서 크고 다당제에서 작다.
바로알기 |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여 정당 간 의견 조정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당제보다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191 ⑤ 정당 체제 유형은 정치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정당의 이념적 분포는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당 체제 유형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다. ②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은 정당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당 체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③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당 내부의 민주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당 체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④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는 정당의 이익 집약 기능과 관련되지만, 정당 체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192 모범 답안 두 정당이 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국의 정당 체제는 양당제이고, 여러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차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을국의 정당 체제는 다당제이다.

193 갑국의 정당 체제는 양당제, 을국의 정당 체제는 다당제이다. ㄱ. 양당제는 주요 두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정당 간 의견 조정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다당제보다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ㄹ.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정당이 중재 역할을 하여 갈등을 조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바로알기 | ㄴ. 소수 집단의 의사는 양당제보다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에서 더 잘 반영될 수 있다. ㄷ. 정치적 책임 소재는 다당제보다 두 개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양당제에서 더 명확한 편이다.

개념 보충

양당제와 다당제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대표적인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고자 경쟁하는 제도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고자 경쟁하는 제도
장점	• 정국이 비교적 안정됨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함	• 국민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함
단점	•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음 • 양당 간의 대립 시 중재가 어려움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이 우려됨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194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며 그 정당이 의회 의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병국의 정당 제도는 일당제이다. 일당제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므로 정단 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어려울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일당제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므로 정책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

195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 병국은 일당제이다. ㄱ. 갑국은 양당제이므로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다당제인 을국에 비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ㄴ. 일당제인 병국과 달리 다당제인 을국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정당 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병국은 일당제이므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ㄹ. 일당제인 병국은 애초에 경쟁하는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 간 대립'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196 (가)는 다당제, (나)는 일당제, (다)는 양당제이다. ㄱ.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많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유리하다. ㄴ. 양당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다당제에 비해 정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바로알기 | ㄷ. 다당제는 일당제와 양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ㄹ. 일당제는 다른 정당의 견제를 받지 않으므로 양당제나 다당제에 비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197 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당을 통해 형성되고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지만, 양당제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③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의사 결정이 일부 지도자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도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의사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므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여러 정당이 공존할 수 있다.

198 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운영 자금의 대부분을 당비가 아닌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당비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당원의 참여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 운영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정당 운영 자금의 구성 형태만으로 행정부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정당 간 대립의 정도는 정치 문화나 정당 체제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정당 운영 자금의 구성 형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③ 정당 운영 자금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민의 정당 선택 폭은 정당의 수나 정당 체제와 관련이 있으며, 정당 운영 자금의 구성 형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99 ② 국민 참여 경선제는 각 정당이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할 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일반 국민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천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③ 국민 참여 경선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민 참여 경선제는 공천 과정에 당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⑤ 국민 참여 경선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신속한 공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200 ⑤ 일부 당 간부가 주요 결정을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일반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당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한다고 해서 일반 당원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원에 따라 당비 부담액을 차등화한다고 해서 일반 당원의 의사 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반 당원의 정당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일반 당원의 의사 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④ 당 지도부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하면 일반 당원의 의견이 정당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201 **모범 답안** 시민들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202 정당은 정권 획득을 통한 자신들의 강령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책으로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⑤ 정당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진다.

203 제시된 사례에서 '○○ 단체'는 식품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소속 회원들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③ 이익 집단은 비슷한 직업이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한 집단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바로알기 | ①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공직을 담당할 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204 ⑤ 제시된 사례에서 시민 단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사용을 분석하고 예산 삭감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정치 사회화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제시된 사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③ 제시된 사례에 시민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를 억제하는 시민 단체의 기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정권 획득을 통해 정강의 실현을 도모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205 ③ 갑, 을, 병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독자 투고를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언론을 활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교사의 질문으로는 '시민은 언론을 통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가 가장 적절하다.

206 ㄴ. 시민은 사회 문제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신문사에 제보하여 특정 쟁점을 공론화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ㄷ. 시민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독자 투고를 하는 등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에 해당하며,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ㄹ.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및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7 ④ 동일한 산업 재해 실태에 대해 A 신문은 작업장의 위험성을 강조한 반면, B 신문은 안전사고가 감소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도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도될 수 있으므로, 시민은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언론은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해야 한다. ② 제시된 자료에서 언론이 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시된 자료에서 언론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자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8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이다. ㄱ.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ㄷ. 시민 단체는 정당과 달리 정권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ㄴ. 시민 단체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별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ㄹ. 정당과 시민 단체는 모두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09 ㉠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에 해당한다. ③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 참여 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표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 시민 단체는 이익 집단과 달리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부 각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정권 획득을 통해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정당이다.

210 ㄱ.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ㄴ.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ㄷ.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알기 | ㄹ.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도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211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 (다)는 시민 단체이다. ① 정당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다. ② 정당은 정권 획득,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③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바로알기 | ④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인 사익을 추구한다.

212 정당과 이익 집단은 공익을 추구함 /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구분	A	B	C
정치적 책임	있음	없음	없음
추구 이익	공익	공익	특수 이익
공통점	(가)		

①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A는 정당,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 단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C는 이익 집단이다.

213 ㄴ.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ㄹ.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알기 | ㄱ.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정당이다.

214 공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A는 시민 단체,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B는 이익 집단, 공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C는 정당이다. ②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알기 | ①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정당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도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15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고, 특수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③ 정당은 시민 단체와 달리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바로알기 | ①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자신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서 표출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을 맡기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16 ② (나), (다)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치과정 중 환류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치과정 중 산출에 해당한다. ③ 정당과 달리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 투입된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④ 이익 집단은 시민 단체와 달리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⑤ 언론,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7 선거와 선거 제도

개념 확인 문제 48쪽

217 선거 218 평등 선거 219 소선거구제 220 비례 대표제
221 선거 공영제 222 보통 선거 223 중·대선거구제
224 절대다수 대표제 225 교육감 226 선거 관리 위원회

난이도별 필수 기출 48~55쪽

227 ④ 228 ④ 229 ⑤ 230 ①
231 해설 참조 232 ⑤ 233 ② 234 ④
235 해설 참조 236 ② 237 ④ 238 중·대선거구제
239 ⑤ 240 ① 241 ② 242 ②
243 (가) 소선거구제, (나) 중·대선거구제 244 ③ 245 ⑤
246 ① 247 ① 248 ③ 249 ⑤ 250 ②
251 ③ 252 ② 253 ⑤ 254 해설 참조 255 ④
256 ⑤ 257 ③ 258 ② 259 ④ 260 ③
261 해설 참조 262 ① 263 ③ 264 ⑤ 265 ④
266 ② 267 ③ 268 ① 269 ③
270 A: (가), B: (나)

227 ④ 의무 투표제는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에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여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이러한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① 선거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투표를 의무화하는 주된 목적은 투표율을 높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②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도 한다. ③ 의무 투표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의무 투표제는 투표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228 ④ 제시된 글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보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제한 선거는 재산, 성별, 신분 등의 조건에 따라 일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통 선거 원칙에 반대된다. ⑤ 평등 선거는 각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수와 그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29 ⑤ A국이 문자 해독 능력, 헌법 해독 능력 등을 선거 참여 조건으로 두고 특정 집단을 선거에서 배제한 것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리 선거이다. ②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평등 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 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230 ① 선거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편 투표 과정에서 기표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표 내용을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는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231 모범 답안 (가)의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의 비밀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32 ⑤ 제시된 대화에서 갑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은 쿠데타나 부정 선거와 같이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획득한 권력은 합법성과 권위가 결여되어 국민의 저항을 받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대화는 선거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33 ②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거는 국민이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선거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기능으로 볼 수 없다.

234 ㄴ. (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가 선거를 통해 정치과정에 투입되고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내용으로, 여론을 집약하여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선거의 기능을 보여 준다. ㄹ. (나)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이는 선거의 기능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ㄱ. 선거의 정치권력 통제 기능은 대표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다음 선거에서 해당 대표자를 재신임하지 않고 다른 대표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ㄷ.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수단은 아니다.

235 모범 답안 선거는 국민이 정치 문제와 정책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236 ㄱ. 갑은 노동자와 여성을 포함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ㄹ. 갑은 자본가에게 3표, 지식인과 관리직에게 2표, 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국민에게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모든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을 것이다.
바로알기 | ㄴ. 갑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민의는 대표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ㄷ. 갑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거부하였으므로, 정치적 의견의 가치가 모두 같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237 갑국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므로,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가 획득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② 소선거구제는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불리하다. ③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의 범위가 비교적 좁아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후보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국적인 정책보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쉽다.
바로알기 | ④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238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군소 정당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커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239 A는 중·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이다. ㄷ.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ㄹ.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다.
바로알기 | ㄱ.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소수 정당 출현이 용이하지 않다. 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후보자 간 당선 경쟁이 덜 치열하여 선거 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개념 보충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장점	• 선거 관리가 수월함 • 다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양당 체제를 형성하여 정치적 안정에 유리함	•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함 • 군소 정당 후보도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
단점	• 군소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이 불리함 • 선거구 간 인구 편차로 인해 선거구별로 유권자 표의 가치 차등 문제 발생이 우려됨	•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커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됨 •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인 간 득표수가 다를 경우 유권자 표의 가치 차등 문제 발생이 우려됨

240 (가)는 한 선거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 (나)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이다. ㄱ.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인 (나)가 적용된다. ㄴ.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개의 소선거구를 하나로 묶은 형태이므로 개별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소선거구제보다 크다.
바로알기 | ㄷ. 선거 관리가 쉬운 것은 선거구 범위가 작고 당선자 수가 적은 소선거구제이다. ㄹ. 다당제 형성에 유리한 것은 군소 정당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선거구제이다.

241 ②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할 경우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요 정당 간 경쟁이 강화되어 양당제가 형성되기 쉽다.
바로알기 | ①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③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비교적 쉽다. ④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유리한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여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이다. ⑤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로 과소·과대 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242 갑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 을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이다. ㄱ.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적다. ㄹ.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높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ㄷ.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적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243 4개의 선거구가 있고, 당선자 수가 4명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임

(가) 적용 시 예상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선거구	갑-1	230	180	200
	갑-2	240	210	140
	을-1	50	290	140
	을-2	230	200	190
득표수		750	880	670
득표율(%)		32.6	38.3	29.1
당선자 수		3	1	0

2개의 선거구가 있고, 당선자 수가 4명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임

(나) 적용 시 예상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선거구	갑	470	390	340
	을	280	490	330
득표수		750	880	670
득표율(%)		32.6	38.3	29.1
당선자 수		1	2	1

(가)는 갑-1, 갑-2, 을-1, 을-2 4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이다. 반면, (나)는 갑, 을 2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이다.

244 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 다당제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ㄹ.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인이 얻은 득표수가 다를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많아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소선거구제보다 어려울 수 있다. ㄷ.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 과소·과대 대표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245 ⑤ 단순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바로알기 | ①, ③ 절대다수 대표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④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으나 선거 관리가 쉽다.

246 ① 입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는 제시된 사례에서처럼 100명의 유권자 중 21명의 지지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알기 | ②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정치적 무관심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직접 도출되는 문제점이 아니다. ④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당선자 결정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여 오히려 선거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은 편이다. ⑤ 단순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군소 정당보다 거대 정당에 유리하므로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247 (가)는 단순 다수 대표제, (나)는 절대다수 대표제의 하나인 결선 투표제이다. ① 단순 다수 대표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갑국의 A 후보자처럼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나)는 1차 투표에서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이 다시 경쟁하는 결선 투표제로, 당선을 위한 일정한 득표 기준이 존재한다. ③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하면 당선되므로 후보자 간 정책 연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나)의 경우 2차 투표를 앞두고 a와 b 후보는 탈락한 c 후보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연대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④ 단순 다수 대표제는 득표를 위한 절대 기준이 없으므로 절대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1회 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선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 개념 보충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

구분	단순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의미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방식 → 일반적으로 과반수 득표가 당선 기준이 됨
장점	선거 관리와 당선자 결정이 편리함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고 사표가 많이 발생함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248 ③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가)는 비례 대표제이다. 1차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나)는 절대다수 대표제 중에서 결선 투표제이다.

249 ⑤ 갑국의 2대 의회 의원 선거부터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 정당에 1표를 각각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여 유권자의 정당 지지 의사를 비례 대표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은 선거 관리 비용 절감과는 큰 관련이 없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운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군소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을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비례 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의 의회 진출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50 ② 갑은 비례 대표 의원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고, 특정 정당이 한 권역의 비례 대표 의석을 과도하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의석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이 해당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거나 과도하게 차지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특정 정당의 지역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권역별 비례 대표제와 의석 상한제의 도입이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거나 선거 관리 비용을 줄인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비례 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두 비율이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비례 대표제를 통해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지만, 사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1 A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대표제, B는 한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ㄴ. 단순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를 바로 당선자로 결정하는 반면, 절대다수 대표제는 필요에 따라 결선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가 당선자 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적다. ㄷ. 절대다수 대표제는 당선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에 유리하다.

바로알기 | ㄱ. 비례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ㄹ.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모두 절대다수 대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52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② 지역구 의원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된다.

바로알기 | ①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1표만 행사하며, 이 표가 정당별 득표율 계산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1인 1표씩을 행사한다. ③ 지역구 의원은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을 선출하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모두 사표가 된다. ④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⑤ 비례 대표 의석은 별도의 정당 투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253 A는 비례 대표제이다. ① 비례 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② 비례 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에 유리하다. ③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던진 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므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크다. ④ 비례 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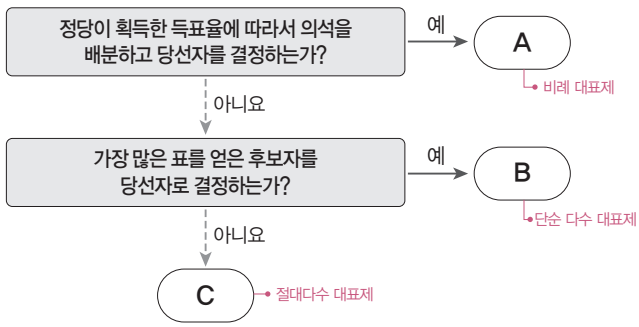
바로알기 | ⑤ 비례 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서 다당제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54 **모범 답안** A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워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255 ④ 갑국은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므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반면, 병국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여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비례 대표 의원 선출 시 갑국은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거대 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병국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소수 정당도 비례 대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병국은 갑국에 비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다.

바로알기 | ①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지역구 의원 선출에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을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므로, 지역구 의원 선출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병국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투표 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유권자가 직접 지지하는 정당에 행사한 표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병국의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갑국과 을국에서는 지역구 선거에 행사한 표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도 활용되므로 유권자는 1인 1표씩을 행사한다. 반면, 병국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출과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각각 1표씩 행사하므로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256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비례 대표제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따라서 A는 비례 대표제, B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⑤ 비례 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나 절대다수 대표제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바로알기 | ① 비례 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② 단순 다수 대표제는 주요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불리하다. ③ 절대다수 대표제는 후보자가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를 다시 해야 하므로,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 대표제는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257 각 선거구별로 의석수가 1석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에게 투표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사표가 된다. 갑 선거구는 6만 표, 을 선거구는 4만 5천 표, 병 선거구는 3만 표, 정 선거구는 4만 표가 사표이다. 따라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선거구는 병 선거구이다. ㄷ. A당은 갑~정 선거구에서 7만 5천 표를 받았으나 갑 선거구에서만 1석을 확보하였다. C당도 7만 5천 표를 받았으나 을 선거구와 병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여 2석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C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A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보다 과대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제시된 자료의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ㄹ.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선거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다.

258

〈전체 의석 분포〉

구분	의석수(석)	의석률(%)
A당	123	41.0
B당	122	40.7
C당	38	12.7
D당	7	2.3
무소속	10	3.3
계	300	100

〈비례 대표 선거 결과〉

구분	의석수(석)	의석률(%)
A당	13	27.7
B당	17	36.1
C당	13	27.7
D당	4	8.5
계	47	100

• 지역구 의석수(=300-47)와 지역구 수가 일치함 → 소선거구제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ㄱ.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므로 낙선한 후보자가 얻은 표는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ㄹ.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정부 형태와 행정부 구성 정당을 알 수 없어 여대야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ㄷ. 비례 대표 의원 수를 줄이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259

• 총의석수 = 150석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5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가 같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별도로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 선거구당 2명 선출 → 중·대선거구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51	32	10	7
정당 득표율(%)	50	28	14	8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갑국의 지역구 의석수는 100석이고, 비례 대표 의석수는 50석이므로, 총의석수는 150석이다. 지역구 선거구는 50개이므로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수	51	32	10	7	100
비례 대표 의석수	25	14	7	4	50
총의석수	76	46	17	11	150

④ A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은 50%이지만 총의석률은 약 50.7%이고, B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은 28%이지만 총의석률은 약 30.7%이다. 따라서 A당과 B당은 모두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의석률이 높다.

바로알기 | ① 갑국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별도의 정당 투표를 실시하므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따라서 1인 2표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C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10석, D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7석이므로, 두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3석이다. ③ 갑국의 지역구 의석수는 100석이고 선거구 수는 50개이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51석인데 선거구 수는 50개이므로, A당은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했음을 알 수 있다.

260

ㄴ.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중·대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ㄷ.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바로알기 | ㄱ.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에 소속될 수 없으며 정당의 공천도 받지 않는다. ㄹ.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봉쇄 조항)을 충족한 정당에 한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모든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 것은 아니다.

261

모범 답안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2표제에 따라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이때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262

ㄱ.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대통령과 국회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르다. ㄴ. 대통령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다.

바로알기 | ㄷ. 국회 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단순 다수 대표제를,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비례 대표제를 적용한다. ㄹ.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실시한다.

263

ㄴ. 소선거구제는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므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 형성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ㄹ.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다른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당선자 결정 방식이 복잡하다고 보기 어렵다.

264

제시된 자료에서 A당과 B당의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의석률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 문제를 보여 준다. 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어 사표를 줄이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사전 투표를 확대하면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나,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모바일 투표 도입은 투표 편의를 높일 수 있으나,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줄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④ 후보자의 기탁금을 높이는 것은 후보자 수를 조절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265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며, 재력이 부족한 사람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A는 선거 공영제이다. 따라서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 운동 방식, 선거 운동의 관리·감독 주체, 선거 운동 비용의 보전 범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바로알기 | ④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은 대표 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266 ㄱ, ㄷ. 비례 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여성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ㄴ. 제시된 법률 조항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ㄹ. 사표는 선거구제나 대표 결정 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제시된 법률 조항의 도입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267 제시된 글의 밑줄 친 내용은 집권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한 것으로, 게리맨더링 사례에 해당한다. ③ 게리맨더링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바로알기 | ① 복수 정당제는 여러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게리맨더링의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선거 공영제는 공직 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정당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 ⑤ 국민 경선제는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268 ① 제시된 헌법 조항은 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제시된 헌법 조항은 선거 운동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선거 운동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양당제의 형성 여부는 주로 선거구제와 관련이 있으며,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 ⑤ 선거 운동을 국가 기관이 관리한다고 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는 선거구제와 관련이 있다.

269 (가)는 선거 공영제, (나)는 선거구 법정주의, (다)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해당한다. ㄴ.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ㄷ. 선거 관리 위원회는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알기 | ㄱ. 게리맨더링 방지는 선거구 법정주의의 목적이다. ㄹ. 선거 과열 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선거 공영제의 목적이다.

270 을의 설명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병의 설명인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모두 선거 공영제의 목적이다. 따라서 A는 (가)이다. 갑의 설명인 '게리맨더링 방지'는 선거구 법정주의의 목적이다. 따라서 B는 (나)이다.

08 미디어와 정치 참여

개념 확인 문제 57쪽

271 미디어 272 수용자 273 피선거권자 274 미디어 리터러시
275 프레이밍 효과 276 뉴 미디어 277 허위 정보 278 확증 편향
279 의제 설정 기능 280 게이트 키핑

난이도별 필수 기출 57~59쪽

281 ④ 282 ② 283 ⑤ 284 ① 285 ④
286 ① 287 ④ 288 ⑤ 289 ② 290 ⑤
291 ③ 292 ③ 293 해설 참조

281

일반적인 특징	미디어의 유형
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함	A, B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함	A, C

텔레비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텔레비전, 종이 신문

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한 미디어는 텔레비전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한 미디어는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이다. 따라서 A는 텔레비전, B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C는 종이 신문이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종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이용 가능한 채널이 다양하다.
바로알기 | ① 텔레비전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종이 신문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아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③ 쌍방향 정보 전달에 유리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⑤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은 전통적 미디어에 해당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뉴 미디어에 해당한다.

282 ② B 신문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집중 보도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미디어의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미디어는 정치권력을 직접 형성하지는 않는다. ③, ④, ⑤ 미디어의 역할이지만, A 신문과 비교할 때, B 신문의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283 ⑤ 제시된 자료에서 방송사는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체험 학습 기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여 사회적 쟁점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례의 핵심은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쟁점을 토론 의제로 설정하여 공론화한 데 있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디어가 권력 남용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나타나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가 아닌 공적 성격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므로 이익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토론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일부 나타나지만, 사례의 핵심은 현장 체험 학습 기피 현상을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공론화한 데 있다.

284 ① 제시된 사례에서 기자가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제시된 사례에서 기자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방송에서 특정 후보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 기자가 정보를 왜곡하여 허위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제시된 사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화면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한 자료 화면의 적절성에 있다.

285 허위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만든 정보이다. 허위 정보는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인물을 사칭하거나 자극적인 제목과 조작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이를 사실로 믿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바로알기 | ④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의 정보를 보도한 것은 오보에 해당한다.

286 ㄱ, 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정보를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ㄷ. 하나의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편향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ㄹ. 정보의 공유 횟수가 많다고 해서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개념 보충

선거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태도

유권자로서의 태도	• 같은 정보도 미디어에 따라 달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확인해야 함 • 정보와 관련한 통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해야 함
피선거권자로서의 태도	• 미디어를 통해 공약, 정책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함 • 상대 정당 또는 상대 후보자 비판 시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함

287 ④ 제시된 사례는 ○○뉴스가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일부 유권자들이 '부정 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결국 의사당 난입이라는 극단적 사태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여 준다. 이후 부정 선거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바로알기 | ①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여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교훈은 도출할 수 없다. ③ 언론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허위 정보 유포나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미디어의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제시된 사례의 핵심은 허위·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시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88 ⑤ ㉠은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활용 능력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을 넘어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289 ㄱ. 미디어의 속성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필요한 자세이다. ㄹ. 정보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토하는 태도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필요한 자세이다.

바로알기 | ㄴ. 정보의 신속성이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필요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ㄷ.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미디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면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필요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290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하기 쉽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주로 교류하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거나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과 필터링은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하려는 태도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291 ①, ②, ④, ⑤ 허위 정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와 저자가 명확한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추가로 검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바로알기 | ③ 색상이나 이미지의 선명도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허위 정보 판별 체크리스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92 ③ (가)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프레이밍 효과이다. (나)는 미디어가 특정 문제를 반복적·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대중도 그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이다. (다)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언론사 내부의 기자나 편집자 등이 정보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 키핑에 해당한다.

293 **모범 답안**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미디어는 정부에 유리한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하고, 정부가 지정한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보도할 정보를 선별하였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5~08강 | 60~63쪽

294 ④	295 ①	296 ①	297 ①	298 ⑤
299 ①	300 ④	301 ③	302 ⑤	303 ②
304 ⑤	305 ④	306 ②	307 ⑤	308 ②
309 ④				

294 ㉠은 투입, ㉡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 기관, ㉢은 산출, ㉣은 환류이다. ④ 선거 참여는 국민의 요구나 지지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투입에 해당하며, 기존 정부나 대표자의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 결과를 통해 다시 정치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류에도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대체로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한 일방적인 산출이 많으므로 투입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산출이 활발하다고 해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이 형성·행사될 때 높아질 수 있다. ⑤ 환류가 투입으로 이어질수록 정책 산출에 대한 평가와 수정 요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95 ① 갑은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의 참여를 강조하므로 정치 참여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갑은 시민의 정치 효능감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을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보다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④ 을은 시민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결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므로, 정치 지도자의 재량권 확대를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갑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과 을이 모두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296 ㄱ. 시민 단체 활동, 청원, 투표, 집회·시위, 인터넷상 댓글 작성 및 토론 참여 등은 모두 정치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갑국이 모든 항목에서 을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므로, 갑국의 투입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ㄴ. 을국은 시민의 정치 참여 비율이 갑국보다 낮아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정책 결정은 정부 기관이 담당한다. 갑국에서 시민 단체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일 뿐, 시민 단체가 정책 결정을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ㄹ. 청원, 투표, 인터넷상 댓글 작성 및 토론 참여 등은 개인적 정치 참여에, 시민 단체 활동과 집회·시위 참가 등은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갑국에서는 개인적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치 참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므로 주로 개인적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국에서는 집단적 정치 참여 항목(시민 단체 활동 8%, 집회·시위 12%)이 개인적 정치 참여 항목(청원 25%, 투표 65%, 댓글 작성 및 토론 21%)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므로, 집단적 정치 참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

297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이다. ①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활동이 지나칠 경우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의사 단체, 변호사 단체와 같은 각종 직능 단체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298 A국은 양당제, B국은 다당제이다. ⑤ 다당제 국가인 B국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므로 양당제 국가인 A국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알기 | ① B국은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연립 정부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A국이 양당제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원 내각제에서도 양당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한다. ② 양당제 국가인 A국은 다당제 국가인 B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B국은 여러 정당의 연합으로 정권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 ③ A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고, 다른 정당들은 정치과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B국보다 소수 정당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④ 자료는 양당제와 다당제 등 정당 체계의 특징을 보여 줄 뿐,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한지는 알 수 없다.

299 ② 일반 국민에게도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당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소수 지도부 중심의 후보자 선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사가 후보자 선출 과정에 반영되므로 상향식 의사 결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당원과 일반 국민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정치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당내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은 후보자 선출 권한을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오히려 정당 지도부나 대표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300 ④ A당은 후원금 비중(50%)이 가장 높고, B당은 당비 비중(62%)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후원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원금 비중이 높은 A당은 당비 비중이 높은 B당에 비해 후원 세력의 압력에 취약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를 배출하여 정권을 잡은 정당은 여당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라고 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행정부 수반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알 수 없다. ② B당은 당비 비중이 높지만 당원의 수가 많아서인지, 1인당 당비 액수가 높아서인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③ 정당 운영 자금의 구성과 지도부의 전문성은 관련이 없다. ⑤ 정당 운영 자금의 구성과 국민의 지지도는 관련이 없다.

301 (1)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므로, 특수한 영역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옳은 답안은 '○'이다. (2)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답안은 '○'이다.

(3) 이익 집단은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옳은 답안은 '○'이다. (4) 이익 집단은 회비, 기부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므로, 일반적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은 답안은 '×'이다. (5) 정치적 충원 기능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치 지도자를 선발·충원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답안은 '×'이다. ③ 학생은 (1), (2), (4)번에 옳은 답안을 작성하였으므로, 학생이 얻은 점수는 3점이다.

302 ⑤ 제시된 자료에서 언론은 주취 폭력 문제를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고 관련 치료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3 헌법재판소는 집행 유예자가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범죄 전력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ㄱ, ㄹ. 보통 선거는 재산,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보통 선거와 대비 되는 개념은 일정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 선거이다.
바로알기 | ㄴ.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1인 1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04 그림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①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므로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모두 사표가 된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보다 사표가 증가할 수 있다. ②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석을 두고 후보자들이 경쟁하므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 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선거 관리가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경향이 있어 군소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305 ㄴ. 을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로서 주요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할 수 있다. ㄹ. 을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가 결정되므로,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가 결정되므로,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들이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낮고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ㄷ. 갑국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할 수 있지만, 을국은 지역구 후보에게 행사한 표가 지역구 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비례 대표 의원 의석 배분을 위한 정당 득표율 산정에도 활용된다. 이때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 대표 의원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을국의 선출 방식이 갑국보다 평등 선거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06

총의석수 = 200석 · 1인 2표제 · 소선거구제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당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동일하며, 각 정당은 1명씩만 공천하였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30	51	15	4
정당 득표율	38	25	26	11

* 갑국에는 A당~D당만 존재하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 대표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한다. 전체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으로 할당하고, 할당 의석수에서 지역 대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각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수로 배정하며, 지역 대표 의석이 할당된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의석을 인정하고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개편안 적용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다.

자료를 토대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현행〉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수	30	51	15	4	100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	38	25	26	11	100
계	68	76	41	15	200

〈개편안〉

– 정당별 할당 의석수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할당 의석수	76	50	52	22	200

– 실제 의석 배분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수	30	51	15	4	100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	46	0	37	18	101
계	76	51	52	22	201

② 개편안에서 B당의 할당 의석수는 50석인데, 지역구 의석수는 51석이므로 초과 의석이 1석 발생한다.
바로알기 | ① 선거구가 50개이고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명만 공천한다면, 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지역구 의석은 최대 50석이다. 그런데 B당이 51석을 얻었으므로 선거구는 최소 51개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총 100명이고 각 선거구당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고려하면,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③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현행에서는 38석, 개편안에서는 46석으로 개편안이 더 많다. C당의 비례 대표 의석도 현행에서는 26석, 개편안에서는 37석으로 현행보다 개편안이 더 많다. ④ D당의 총의석은 현행에서는 15석이지만 개편안에서는 22석이므로 현행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다. ⑤ 현행 지역구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이므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307 ⑤ 우리나라 기초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다.

바로알기 | 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 지역구 의원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다. ② 우리나라 국회의 비례 대표 의원은 유권자가 정당에 별도로 투표하고, 그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이 배분되어 선출된다. ③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에 소속할 수 없고,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모두 4년마다 실시된다.

308 ② 제시된 자료는 방송사가 국회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하였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 보도를 한 사례이다. 이는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시민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고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 참여가 실제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정치 효능감의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미디어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보도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④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전달하는 편파 보도는 미디어의 문제점이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사례일 뿐, 편파 보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대의 민주주의가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309 ④ 두 학생은 편향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시민은 다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등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국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미디어를 일정 부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지만, 제시된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② 미디어는 공적 사안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도 제공한다. ③ 미디어는 시민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제시된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⑤ 미디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실 보도뿐 아니라 해설이나 논평 기능도 수행한다.

09 국가 권력의 형성

개념 확인 문제 65쪽

310 정치권력 311 국가 권력 312 정당성 313 권력
314 권력 분립의 원리 315 국가 316 왕권신수설
317 국민 주권주의 318 입헌주의 319 법률

난이도별 필수 기출 65~67쪽

320 ② 321 ⑤ 322 ⑤ 323 ①
324 해설 참조 325 ④ 326 강제력 327 ⑤ 328 ③
329 ① 330 ② 331 ③ 332 ② 333 ①
334 ④

320 A는 정치권력이다. ㄱ, ㄷ. 정치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바로알기 | ㄴ. 정치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ㄹ. 정치권력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없어도 강제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321 ⑤ 통치자의 교체나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국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정치권력은 집단이 존재하는 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모두 정치권력의 특징이지만,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 ③ 국가 권력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권위의 특징에 해당한다.

322 ①, ②, ③, ④ 국가 권력은 권력의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 지속성,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성,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구성원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닌다. 또한 국가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국가 권력은 국가 내의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개념 보충

정치권력과 국가 권력

정치권력	•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됨 •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됨 •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힘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함
국가 권력	•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됨 •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 구성원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음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과 제도는 다른 집단의 규칙보다 우선함 •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함

323 ① 국가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며, 국가 구성원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권력으로 제정한 법과 제도는 다른 집단의 규칙보다 우선한다. 한편 국가 권력은 통치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 모든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은 '갑'이다.

324 모범 답안 국가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325 ④ ○○국 의회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추진한 사례는 국가 권력이 강제력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국가 권력의 행사 목적을 경제적 이익 추구로 한정할 수는 없다. ② 국가 권력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 및 국제 규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③ 국가 권력은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⑤ 국가 권력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

326 칼이 상징하는 국가 권력의 속성은 강제력이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327 근대 사회 계약론자인 갑은 홉스이다. ⑤ 군주의 몸이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① 근대 사회 계약론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② 국가 권력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③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④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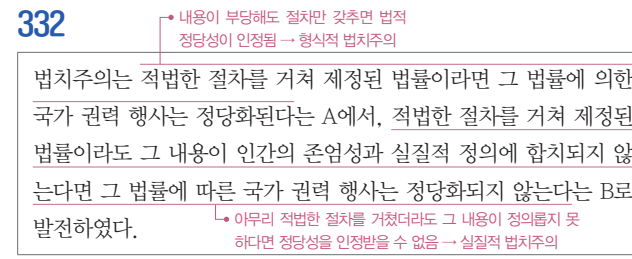
328 ③ 근대 이전과 달리 근대 이후에는 국가 권력을 여러 권력 분야로 분리하고 각 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었다.
바로알기 | 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 국민 주권 사상은 근대 이후에 강조되었다. ② 군주의 절대 권력이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된 시기는 근대 이전이다. ④ 다수의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이후이다. ⑤ 근대 이전에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근대 이후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강조되었다.

329 (가)는 대헌장(1215), (나)는 권리 청원(1628)이다. ① 대헌장과 권리 청원은 모두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사회주의 사상은 19세기 이후 확산되었다. ③ 산업 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④ 보통 선거권 확대 운동은 19세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⑤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요구는 20세기에 본격화되었다.

330 ② 대헌장과 권리 청원은 군주도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원리이다. ③ 사회 계약론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 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여러 권력 분야로 분리하고, 각 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31 ㄱ. 수권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므로, 제정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법률로 평가될 수 있다. ㄴ. 수권법은 정부가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력 분립과 헌법의 최고성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나치 정권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바로알기 | ㄷ. 수권법은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자가 법을 통해 자의적인 지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2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 과정의 절차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목적이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도 국가 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중시하지 않는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차상의 합법성만을 요구하는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상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당성까지 함께 요구한다. ④ 국민 주권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333 ①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기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알기 | ② 권력 분립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국민이 직접 국가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권력 분립의 원리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⑤ 국가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목적과 반대된다. 이는 오히려 권력 남용과 독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334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ㄱ.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로, 근대 이후 사회 계약설의 등장으로 보편화되었다. 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국민이 중요한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된 사례이다. ㄹ.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리는 모두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된 원리이다.
바로알기 | ㄷ. 국가 권력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이다.

10 정부 형태

개념 확인 문제 70쪽

335 의회 336 내각 337 직선제 338 법률안 거부권
339 국무총리 340 내각 불신임권 341 권력 분립 342 의회 의원
343 제3차 개헌 344 국회

난이도별 필수 기출 70~75쪽

345 ② 346 ③ 347 ③ 348 ② 349 ①
350 ③ 351 ④ 352 해설 참조 353 ② 354 ①
355 ④ 356 해설 참조 357 ① 358 ③ 359 ⑤
360 ② 361 ⑤ 362 이원 집정부제 363 ②
364 ② 365 ⑤ 366 ④ 367 ② 368 ⑤
369 해설 참조 370 ② 371 ④ 372 ① 373 ④
374 법률안 거부권

345 A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 다수 세력이 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를 이끄는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르다. 국가 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맡고, 행정부 수반은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맡는다.

바로알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와 내각의 각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이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346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고,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교사가 두 가지는 A에 대해 옳게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A는 의원 내각제이고, B는 대통령제이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ㄹ. (가)에는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행정부 수반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므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347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운영되는 A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여 내각을 총사퇴하게 할 수 있으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바로알기 | ①, 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의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견이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48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의회 의원에게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는 을의 진술은 틀리다. ㄱ. ㉠이 '갑'이라면, (나)에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라는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에 들어가면, 옳게 말한 학생(㉠)은 갑이 된다.

바로알기 | ㄴ. ㉠이 '병'이라면, (가)에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에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진술이 들어가면, (나)에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입니다.'라는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349 ① 제시된 글은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왕의 전제적 권력 행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대통령제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350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에게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며,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 형태이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를 통해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51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C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라는 것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대통령 소속 정당(C당)이 의회에서 소수당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갑국의 정치 상황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이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 겸직이 금지된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 형태이다.

352 **모범 답안**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 다수파가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반면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353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률안을 의회로 환부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바로알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행정부 수반이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개념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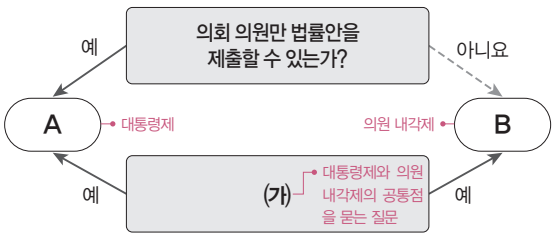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방식

의원 내각제	의회 의원 선거로 의회가 구성되면,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됨 →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기도 함
대통령제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됨 →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구성됨

354 ㄱ, 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모두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바로알기 | ㄷ.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ㄹ.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355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예'로 답한 A는 대통령제, '아니요'로 답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ㄹ. (가)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예'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므로, 제시된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국가 원수가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356 **모범 답안** A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B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서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이 협조할 경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357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 해산권 행사를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③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 모두 의회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가 아닌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358 t+1 시기 B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라는 것을 통해 t+1 시기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② t+1 시기에 여당인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⑤ t 시기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이고, t+1 시기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이다.

359

질문	A (의원 내각제)	B (대통령제)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요
(가) 두 정부 형태의 공통점을 묻는 질문	예	예
(나) 대통령제만의 특징을 묻는 질문	아니요	예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⑤ (나)에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니요', 대통령제에서는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의회가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등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 다수 세력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한다. ④ (가)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360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부 수반이 B당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③ 공무원 임면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⑤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361 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의 의원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에 따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연립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내각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 내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62 그림은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보여 준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이원 집정부제에 해당한다.

363 ②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③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행정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한다. ④ 이원 집정부제에서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이원 집정부제는 외형상 대통령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는 의원 내각제 속성을 지닌다.

364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가)는 제9차 개정 헌법이다. 유신 헌법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나)는 제7차 개정 헌법이다.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채택한 (다)는 제3차 개정 헌법이다. ㄱ.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ㄷ. 제3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제7차 개정 헌법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ㄹ.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정 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365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 ㉡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루어진 제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 5·16 군사 정변 이후 이루어진 제5차 개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다시 채택하였다. ㉣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바로알기 |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제9차 개정 헌법이 만들어졌다.

366 ①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② 제3차 개헌에서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였다. ③ 제5차 개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였으며,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였다. ⑤ 제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으며,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정 감사권 부활 등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바로알기 | ④ 제7차 개헌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채택되고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가 나타났다.

367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이며, 국무 회의를 헌법 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A)의 특징이다. B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가)에는 대통령제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B)의 특징이다. ④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A)의 특징이다. ⑤ 의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B)의 특징이다.

368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국회가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요소에 해당한다. ㄹ.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국민이 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바로알기 | 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요소에 해당한다.

369 **모범 답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70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인 A는 의원 내각제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형태인 B는 대통령제이다. (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다) 국회의 국무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라) 대통령 직선제는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A) 요소는 (가), (다)이고, 대통령제(B) 요소는 (나), (라)이다.

371 ㄱ.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두 정부 형태의 공통적인 특징인 ㉡에 들어갈 수 있다. ㄴ.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에 들어간다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바로알기 | ㄷ. 의회 해산권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대통령제이고, B가 의원 내각제라 하더라도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에 들어갈 수 없다.

372 ㄱ, ㄴ.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과 국무 회의를 헌법 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가미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ㄷ, ㄹ.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과 국회가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373 ㉠ 국회 의원의 국무총리 겸직, ㉡ 국무 회의 제도,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가미된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바로알기 |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374 제시된 사례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11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개념 확인 문제 78쪽

375 본회의 376 입법 377 행정부 수반 378 대법원
379 위헌 법률 심판 380 10인 381 행정 382 국무 회의
383 상고 384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난이도별 필수 기출 78~85쪽

385 ② 386 ⑤ 387 ⑤ 388 면책 특권 389 ④
390 ② 391 해설 참조 392 ④ 393 ⑤
394 해설 참조 395 ④ 396 ③
397 (마) → (다) → (나) → (라) → (가) 398 ② 399 ③
400 ② 401 행정 국가화 현상 402 ④ 403 ②
404 ③ 405 ② 406 ② 407 ⑤
408 A: 국회, B: 국무총리, C: 대통령, D: 감사원 409 ⑤ 410 ③
411 ④ 412 ④ 413 ② 414 ④
415 해설 참조 416 ③ 417 ③ 418 ④
419 해설 참조 420 ③ 421 ② 422 ② 423 ③
424 ④ 425 (가) 탄핵 심판, (나) 정당 해산 심판 426 ⑤
427 ①

385 국민이 선출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국가 기관인 A는 국회이다. 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국회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국정 감사권과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 심사권을 행사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386 ⑤ 우리나라 국회는 지역구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 의원과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 의석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바로알기 | ①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된다. ②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③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국회는 법률안과 각종 안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개념 보충

국회의 주요 기구

본회의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미리 조사함
교섭 단체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해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

387 ㄷ.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 통제 권한에 해당한다. ㄹ.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ㄱ.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ㄴ. 국회 의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388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 의원 갑은 국정 감사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였으므로 해당 발언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는 국회 의원에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389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법률안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③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법률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이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390 ㄱ.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ㄹ.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하며, 국민 투표로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ㄴ.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 개념 보충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
• 제안 주체: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행정부 • 국회 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국회 재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 국회 의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최종 확정: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391 모범 답안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92 ㄱ, ㄴ, ㄷ. 국회는 대통령이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한다.
바로알기 | ㄹ. 국회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다.

393 ⑤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바로알기 | ①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②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③ 교섭 단체는 국회 내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 의사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단체이다. ④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집회된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는 것은 임시회이다.

394

수행 평가

※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을 네 가지만 서술하시오. (옳은 내용 1개당 1점을 부여하며, 총점은 4점임.)

1점이므로, (가)에는 국회의 권한이 서술되어야 함

답안 (국회의 권한)	점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1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 1점
(가)	1점
(나)	㉢
총점	㉣

모범 답안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395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을 가지므로, ㉠, ㉡은 모두 '1점'이다. ㄴ.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가면 ㉢은 '0점'이다. 따라서 ㉣은 '3점'이 된다. ㄹ. ㉡과 ㉢의 점수가 다르면 ㉢은 '0점'이므로, (나)에는 국회의 권한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과 ㉢의 점수가 같으면 ㉢은 '1점'이므로, (나)에는 국회의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396 ③ 국회가 정부 부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것은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②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④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다. ⑤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 개념 보충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정 및 개정권, 헌법 개정 발의 및 의결권,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등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등

397 법률 제정은 (마) 발의 → (다) 상임 위원회 심사 → (나) 본회의 의결 → (라) 대통령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가) 재의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98 ①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한다.

바로알기 | ②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99 ③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이므로 과반수는 151명 이상이다. 따라서 152석을 보유하고 있는 A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교섭 단체는 원칙적으로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다. A당, B당, C당은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D당은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대통령 소속 정당인 B당(80석)보다 야당 의석수(220석)가 많으므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④ 법률안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므로, 13석을 보유한 D당은 단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모든 국회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조건에 따라 출석 의원은 300명 전원이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B당·C당이 반대할 경우 A당·D당의 의석은 총 165석에 그치므로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없다.

400 ㉠은 행정부이다. ㄱ. 근대 초기에는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에 따라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므로, 행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작았다. ㄹ.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부의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알기 | ㄴ.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국가 작용은 사법 작용이며, 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사법부이다. ㄷ.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행정부에 다른 국가 기관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01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운영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한다.

402 ④ 행정 국가화 현상은 현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입법부·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권력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바로알기 | ① 주민 자치 활동의 위축은 행정 국가화 현상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행정 국가화는 복지 국가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복지 정책 추진이 오히려 용이해질 수 있다. ③ 행정 국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행정 인력의 활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⑤ 행정 국가화 현상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403 자료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타낸다. ㄱ, ㄹ.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조직하고 지휘·감독한다.

바로알기 | 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ㄷ.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04 ③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므로 연임과 중임이 모두 불가능하다. ②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④, ⑤ 선전 포고 및 강화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405 ② 대통령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도록 한다.

바로알기 | ① 국무 회의는 심의 기관이므로 그 의결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국무 회의의 의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06 A는 국무 회의이다. ㄱ.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ㄷ. 국무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바로알기 | 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 개념 보충

행정부 주요 기관의 구성

국무총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국무 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됨
행정 각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함
감사원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407 A는 국무 회의, B는 국회이다. 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바로알기 | ①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맡아 관리하는 사무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은 행정 각부이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③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④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통령만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08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 D는 감사원이다.

409 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바로알기 | ①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②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결산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 ③ 국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10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이다. (1) 대통령은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2)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3)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이다. (4)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따라서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대답한 학생은 (1) ○, (2) ×, (3) ×, (4) ×로 대답한 '병'이다.

411 ① 우리나라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두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2심에 해당하는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③ 각급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1심 판결을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 2심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바로알기 | ④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12 ㄱ. 사법은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국가 작용이다. 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우리 헌법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등을 규정하여 보장한다.

바로알기 | ㄷ. 사법권 독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관의 권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413 헌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의 독립,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한 조항으로,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②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목적은 법관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414 A는 대법원이다. ④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③ 위헌 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에 관한 분쟁 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⑤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은 상고이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은 재항고이다.

415 **모범 답안** 심급 제도, 심급 제도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16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 2심 재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한 경우 2심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③ 모든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B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바로알기 | ① ㉠이 '항고'라면, ㉡은 '재항고'이다. ②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A가 지방 법원 합의부이더라도, 최종심을 담당하는 B는 대법원이다. ⑤ 각급 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417 ① 심급 제도는 판결, 결정, 명령 등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1심을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다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판사가 담당한다. ④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⑤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한다.

바로알기 |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418 제시된 사례에서 재판을 맡은 법원이 지방 법원이고 판사가 한 명이라는 점을 통해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한 재판임을 알 수 있다. ㄴ. 법원은 재판 진행 중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바로알기 | ㄱ. 1심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으므로, 갑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 ㄷ.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19 **모범 답안**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20 A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이고, B는 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2심 법원이다. ①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다면, 2심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각급 법원은 모두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바로알기 | ③ 갑이 B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B가 이를 기각하였다. 이는 B가 해당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421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ㄱ.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ㄷ.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ㄹ. 현행 제도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422 A는 헌법재판소이다. ② 갑이 「○○법」 제△△조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 지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 제△△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두 기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이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지방 법원의 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⑤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423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B는 위헌 법률 심판, C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ㄱ.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다. ㄴ.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바로알기 |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424 (가)는 권한 쟁의 심판이다. ④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한다.

바로알기 | ①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은 정당 해산 심판이다. ②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는 탄핵 심판이다. 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425 (가)는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탄핵 심판이다. (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행정부의 청구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정당 해산 심판이다.

426 ⑤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바로알기 | ① 탄핵 심판은 국회, 정당 해산 심판은 행정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모든 공직자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27 ㄱ.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ㄷ. 정당 해산 심판은 행정부만 청구할 수 있지만, 권한 쟁의 심판은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등도 청구할 수 있다. ㄹ. 헌법 소원 심판 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12 지방 자치

개념 확인 문제 87쪽

428 지방 자치 429 주민 자치 430 교육감 431 주민 투표 제도
432 주민 참여 예산 제도 433 단체 자치 434 지방 자치 단체장
435 조례 436 광역 자치 단체 437 주민 청원 제도

난이도별 필수 기출 87~89쪽

438 ① 439 ② 440 ② 441 ②
442 A: 지방 자치 단체장, B: 지방 의회 443 ④ 444 ④
445 ④ 446 ③ 447 해설 참조 448 ⑤ 449 ②
450 해설 참조 451 ②

438 A는 지방 자치이다. ㄱ.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ㄴ. 지방 자치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알기 | ㄷ.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한다. ㄹ. 지방 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므로 지역 주민의 정치적 관심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39 A는 주민 자치, B는 단체 자치이다. ㄱ, ㄷ. 주민 발안과 주민 소환은 주민이 지방 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 자치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ㄹ. 군청이 지역 하천 정비 사업을 계획·집행한 것과 시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단체 자치의 사례에 해당한다.

440 A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ㄱ.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지방 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바로알기 |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나, 임기는 4년이다. ㄷ.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441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①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⑤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모두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바로알기 | ② 주민 청원에 대한 심사 및 처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442 지방 자치 단체장(A)과 지방 의회(B)를 구성하는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다만 지방 자치 단체장은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 의회 의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선출될 수 있다.

443 (가)는 의결 기관, (나)는 집행 기관이다. ②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의 기관이다. ③ 집행 기관에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포함되며, 광역 자치 단체의 경우 교육감도 포함된다. ⑤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교육감은 모두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바로알기 |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은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수직적 권력 분립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권력 배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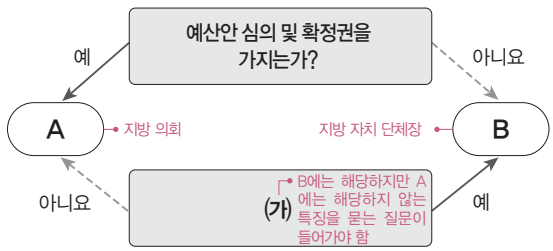
444 ㄴ. 시·도 의회는 광역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고, 시·군·구 의회는 기초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ㄹ. ㉡, ㉣은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역 내 사무를 총괄한다.

바로알기 | ㄱ.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의회는 모두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ㄷ.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445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사무 처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지방 의회는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② ○○도지사(㉠)는 광역 자치 단체장이며, △△시장(㉢)은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⑤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다만, 지방 자치 단체장은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446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지는 기관은 지방 의회이므로, A는 지방 의회이다. 따라서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법률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지방 의회는 조례만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정 및 개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④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과 지방 자치 단체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 모두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개념 보충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 지위: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역 내 최고 의결 기관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 결산 승인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에 대한 심사 및 처리권 등
지방 자치 단체장	• 지위: 지역 내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 기관 • 권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지방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

447 모범 답안 (가) 주민 투표 제도와 (나)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 자치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48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⑤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소환 제도는 모두 주민이 직접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주민 투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제도로, 일반적인 조례 제정·개정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민 투표가 조례 의결의 필수 절차는 아니다. ②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③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 투표 제도이다.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49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 청원이다. ② 주민 청원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 등을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교육감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바로알기 | ① 주민 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주민 투표 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450 모범 답안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451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하천의 물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 자치 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협의 노력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 자치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주민 참여 제도 축소는 제시된 사례의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은 제시된 사례의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중앙 정부가 위임한 사무의 비중 축소는 제시된 사례의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중앙 정부의 통제 강화는 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의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9~12강 | 90~93쪽

452 ④	453 ②	454 ⑤	455 ④	456 ①
457 ②	458 ③	459 ④	460 ⑤	461 ⑤
462 ②	463 ③	464 ④	465 ⑤	466 ②
467 ④				

452 A는 국가 권력이다. ㄴ. 국가 권력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도록 이끌 수 있다. ㄹ. 갑과 을이 옳은 진술을 하였으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 권력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포괄성을 가지므로, 제시된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국가 권력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국가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학생은 갑이 아닌 병이다. ㄷ.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인정된다. 따라서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하다면 해당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453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④ 사회 계약설은 근대 국가 성립의 사상적 배경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입법, 행정, 사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454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사상은 사회 계약설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따라서 A는 사회 계약설,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⑤ 국가의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는 입헌주의이다. C와 D를 서로 바꾸어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였으므로,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D는 입헌주의이다.
바로알기 | ① A는 사회 계약설이다. ②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다수의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C가 권력 분립의 원리이면, (다)에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 권력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법치주의이므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455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하다. ⑤ 자료에서 A는 의회를 통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B는 정부가 의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를 더 강하게 실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엄격히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임기 중에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456

①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였으므로, 다른 정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갑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자료에서 을국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대야소 상황이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이 반드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책임 정치에 유리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 않는다.

457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표는 갑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 것이다. 과반 의석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정부 형태를 판단해야 함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56	25	17	2	(가)
t+1	15	22	60	3	(나)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ㄱ.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가 같고 (가), (나)가 동일하다면, 두 시기 모두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의회 다수당이 A당에서 C당으로 바뀐 두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ㄷ.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1 시기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C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C당이 된다.

바로알기 | ㄴ. t 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이라면,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ㄹ.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된다.

✓ 개념 보충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구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권력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융합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
행정부 수반 선출	의회 다수당이 구성한 내각에서 선출	국민이 직접 선출
행정부 존립	의회의 신임에 의존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임기 보장
의원과 각료 겸직	겸직 가능	겸직 불가
장점	• 의회와 내각이 서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의회와 내각이 협조하는 경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 의회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움 • 여러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정국이 불안정하거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할 수 있음 •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움

458

질문	답변	
	갑	을
A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	예 → 0점	예 → 0점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	예 → 0점	아니요 → 1점
(가) (가)에 옳은 진술이 들어간다면, ㉠, ㉡ 모두 '예', 틀린 진술이 들어간다면, ㉠, ㉡ 모두 '아니요'임	㉠ → 1점	㉡ → 1점
점수	1점	2점

* 각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하면 1점, 옳지 않은 답변을 하면 0점을 부여함.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A가 의원 내각제, B가 대통령제라면, 갑의 점수는 최소 2점이 되어야 한다. 갑의 점수는 1점이므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ㄹ. 갑의 점수는 1점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만 옳게 답하였고, 을의 점수는 2점이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옳게 답하였다.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 ㉡은 모두 '예'가 된다.

459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④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바로알기 | 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 요소로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⑤ 헌법 제63조 제1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요소로서 (라)에 들어갈 수 없다.

460 ⑤ 본회의는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로,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바로알기 | ①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상임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속하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461 ㄷ. 국정 감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C는 입법부, A는 행정부이고, B는 사법부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ㄹ. A가 입법부, C가 사법부라면, B는 행정부이다.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A는 행정부, B는 입법부이고, C는 사법부이다.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ㄴ. 법관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B는 입법부, A는 사법부이고, C는 행정부이다.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462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대법원, D는 국회이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로알기 | ①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463 A는 헌법재판소이고, B는 대법원이며, 해당 결정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의 결정문이다.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갑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명령·규칙·처분 등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갑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상급 기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464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다. 해당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B는 헌법재판소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 것은 국회이다. 해당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C는 국회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이다. ④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대통령과 국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국무 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②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⑤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465 A는 고등 법원, B는 헌법재판소, C는 지방 법원이고,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권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③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66 ㄱ. 주민들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통해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바로알기 | ㄴ. 법률의 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ㄹ.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

467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소환 제도, (다)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④ 주민 투표 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바로알기 | ①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에 해당하며, 주민 투표 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도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된다. ③ 주민 참여 예산제의 결과는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지만, 예산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소환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모두 주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13 국제 사회의 이해

개념 확인 문제 96쪽

468 주권 469 힘 470 국제 연합(UN) 471 냉전
472 자유주의 473 베스트팔렌 조약 474 닉슨 독트린
475 탈세계화 476 현실주의 477 집단 안전 보장 체제

난이도별 필수 기출 96~99쪽

478 ① 479 ㉠ 경쟁, ㉡ 갈등 480 ③
481 해설 참조 482 ⑤ 483 ① 484 닉슨 독트린
485 ⑤ 486 ③ 487 ⑤ 488 ③ 489 ②
490 ⑤ 491 ① 492 집단 안전 보장 체제 493 ②
494 ② 495 ③ 496 ⑤ 497 해설 참조

478 ①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지지만, 강대국이 국제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군사력·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② 주권 국가는 국제 사회의 기본 단위이지만, 제시된 글은 힘의 논리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주권 평등의 원칙상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체이지만, 제시된 글은 힘의 논리로 인해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을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는 제시된 글의 내용과 반대된다. ⑤ 국가 간 협력도 국제 사회의 특징이지만, 제시된 글은 협력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개념 보충

국제 사회의 특징

주권 국가 중심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함
무정부성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힘의 논리 작용	주권 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음
갈등과 협력 공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지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도 함

479 (가)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경쟁에 해당한다. (나)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은 갈등에 해당한다.

480 ㄴ. 갈등은 경제 제재, 무력 분쟁, 외교적 대립, 영토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ㄷ.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커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각국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나타나는 것은 갈등이다. ㄹ.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관계는 협력의 특징이다.

481 모범 답안 국제 사회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협력하기도 한다.

482 ⑤ 30년 전쟁의 종결을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교황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483

질문	국제 연합 A	국제 연맹 B
국제 사회의 평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가?	예	㉠
강대국의 참여를 바탕으로 강제적 제재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국제 연맹과 구분되는 국제 연합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함)	예	아니요
(가)	예	아니요

강대국의 참여를 바탕으로 강제적 제재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UN)이므로 A는 국제 연합(UN), B는 국제 연맹(LN)이다. ㄱ. 국제 연합(UN)과 국제 연맹(LN)은 모두 국제 사회의 평화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에는 '예'가 들어간다. ㄴ.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바로알기 | ㄷ. 국제 연맹(LN)은 강제력이 부족하고 강대국의 불참·탈퇴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 연합(UN)이 창설되었다. ㄹ. (가)에는 국제 연합(UN)은 '예', 국제 연맹(LN)은 '아니요'라고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강대국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질문은 국제 연합(UN)은 '아니요', 국제 연맹(LN)은 '예'로 응답하게 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484 제시된 글은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이다.

485 ①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 국방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②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과도한 군사 개입을 줄이고 냉전의 긴장 완화(데탕트)에 기여한 대외 정책이다. ③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소련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④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책이다.

바로알기 | ⑤ 제시된 자료의 2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핵전쟁의 위협까지 해당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486 제시된 글은 1989년 12월에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 회담을 설명하고 있다. ㄴ. 몰타 회담에서 두 정상이 동유럽의 정치 개혁과 시장 경제 이행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ㄷ. 몰타 회담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실리 추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바로알기 | ㄱ. 몰타 회담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약화되었다. ㄹ.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연합(UN)을 통한 국제 협력이 확대되었으므로, 국제 연합(UN)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87 (가)는 미국과 소련의 몰타 회담으로 냉전 체제가 종식된 사건이고, (나)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축소를 선언하여

냉전 체제 완화(데탕트)를 이끈 정책이다. (다)는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냉전 체제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라)는 19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보를 위해 경쟁하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 → (다) → (나) → (가)이다.

488 ㄱ.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ㄷ. 제3세계의 등장과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 등을 계기로 냉전 체제가 서서히 완화되었다.
바로알기 | ㄴ. 제1차 세계 대전 종결을 배경으로 국제 연맹(LN)이 창설되었고, 그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489 ② ㉠ 세계 여러 국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은 세계화이다. ㉡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현상은 지역 블록화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블록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490 제시된 사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통해 서로의 군사력을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이를 통해 현실주의 관점을 알 수 있다. ⑤ 현실주의 관점은 특정 국가끼리 동맹을 맺고 적대적 동맹을 견제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현실주의 관점은 국가가 보편적 선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② 현실주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중시한다. ③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④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491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 규범을 활용하면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유럽 연합(EU)의 확장은 여러 국가가 경제·정치적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추구한 사례로, 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뒷받침한다. ㄴ.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이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바로알기 | ㄷ. 메콩강 수자원 확보를 위한 주변국 간 경쟁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으로 현실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비 경쟁 심화는 국가 안보와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492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한 국가의 침략 행위를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든 국가가 집단적으로 제재·대응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493 갑, 정은 자국의 이익 추구와 힘의 균형을 강조하므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을, 병, 무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은 갑과 정이다.

494 A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한다고 보므로 현실주의 관점, B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므로 자유주의 관점이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힘을 추구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국가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495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1) ○, (2) ×, (3) ○, (4) ○, (5) ×로 답변하고,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1) ○, (2) ○, (3) ×, (4) ×, (5) ○로 답변한다. 표에서 병의 답변이 현실주의 관점의 답변과 모두 일치하므로,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답변한 학생은 '병'이다.

✓ 개념 보충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	자유주의
전제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만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함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모여 만든 국가는 보편적 선을 추구할 수 있음
입장	•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며, 국가 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나타남 • 세력 균형 정책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
한계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하고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함	평화 확보 전략이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함

496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5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 협정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⑤ 자유주의 관점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 간에는 이해관계의 조화를 바탕으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국가 간 협력보다 경쟁과 대립을 중시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②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중시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③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④ 국가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497 **모범 답안** 현실주의 관점, 현실주의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국가 간 관계를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간과하고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14 국제 문제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개념 확인 문제 102쪽

498 국제 문제 499 안보 500 남북문제 501 총회
502 국제 사법 재판소 503 경제 문제 504 정부 간 국제기구
505 기능적 범위 506 조약 507 국제 비정부 기구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2~107쪽

508 ③ 509 해설 참조 510 ⑤ 511 ① 512 ④
513 ④ 514 해설 참조 515 난민 516 ② 517 ②
518 ④ 519 해설 참조 520 ② 521 ④ 522 ⑤
523 ③ 524 ③ 525 ⑤ 526 ⑤ 527 ①
528 ① 529 해설 참조 530 ⑤ 531 ④ 532 ⑤
533 ④ 534 국제 비정부 기구(INGO) 535 해설 참조 536 ②
537 ④ 538 ②

508 ③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메콩강 상류에 댐과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하류 국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국가 간 문화적·종교적 차이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대립으로 이어져 국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제시된 사례의 분쟁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② 안보를 위한 군비 경쟁은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는 국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제시된 사례의 분쟁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④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국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제시된 사례의 분쟁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⑤ 국제기구는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509 모범 답안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국제 문제가 발생한다.

510 ①, ②, ③, ④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로알기 | ⑤ 국제 사회에는 강제성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문제를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조정, 국제법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11 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제 문제를 규제하고 관리할 강제성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고, 문제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책임을 분담하기 어려워 개별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바로알기 | ② 국제 사회에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익과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③ 국제 사회에는 개별 국가가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모든 국가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④ 국제 문제에 대해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익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자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⑤ 국제 문제는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어 문제 발생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 국가에 부담시키거나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512 (가)는 안보 문제, (나)는 환경 문제에 해당한다. ㄱ. 안보 문제는 국가 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ㄴ.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ㄷ.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은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의 지속으로 나타난 환경 문제이다.

바로알기 | ㄹ. 안보 문제와 환경 문제는 모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513 ④ 개인이나 단체가 상대방을 위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폭력 행위는 테러이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은 남북문제이다.

514 모범 답안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가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보건·의료 분야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515 자연재해, 전쟁, 테러, 빈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한다.

516 ㄱ, ㄷ. 기후변화는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등에 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제시된 글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영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 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ㄹ. 제시된 글에는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17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분쟁 해결 기구(DSB)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문제의 해결에 해당한다.

518 그림이 나타내는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UN)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② 10개 비상임 이사국 중 5개국이 매년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실질 사항에 관한 의결에서 5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비상임 이사국만 임기가 2년이고, 상임 이사국은 교체되지 않는다.

519 모범 답안 의결되지 않았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실질 사항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5개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안건은 12개국이 찬성하였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의결되지 않았다.

520 ② 국제 연합(UN)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기관인 A는 총회이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인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인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 개념 보충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음
안전 보장 이사회	•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15개국 중 9개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됨
국제 사법 재판소	•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UN)의 사법 기관 • 재판 청구는 국가만 가능함.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함

521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UN)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당해 사건의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522 ㉠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못한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23 ①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되었다. ② 국제 연합(UN)은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IGO)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국제 연합(UN)은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실현 및 국가 간 우호 관계 증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⑤ 국제 연합(UN)은 특정한 국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최소 3개 이상의 국가가 협약과 승인을 통해 구성한 조직체인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③ 국제 연합(UN)은 특정 지역의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범세계적 기구에 해당한다.

524 ③ 세계 보건 기구(WHO)는 감염병과 보건 문제 등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바로알기 | ①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라는 특정 영역에서 다수 국가가 합의한 명시적 규칙 체계로서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② 파리 협정은 국가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정에서 탈퇴하였다면, 다른 국가들의 의사만으로 ○○국에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④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NGO), 개인 등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볼 수 있다.

525 ⑤ 유니세프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 연합(UN)의 산하 기구이고, 그린피스는 국제 비정부 기구(NGO)에 해당한다. 국제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시된 두 사례는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이라는 수업 주제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사례는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② 유니세프는 국제 연합(UN) 산하 기구이지만 그린피스는 국제 비정부 기구(NGO)이므로, 두 사례를 모두 국제 연합(UN) 산하 기구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③ 제시된 사례는 국제 사회 문제의 시대적 변화가 아닌,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보여준다. ④ 그린피스의 사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인 반면, 유니세프의 사례는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526

진술 \ 학생	갑	을	병	정	무
(1)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사법 기관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	○	×	○	○	×
(2) 국제 연합(UN)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 안전 보장 이사회	×	○	×	○	○
(3) 의결에서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행사할 수 있다. → 총회	○	○	○	×	×
(4) 안건을 의결하려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안전 보장 이사회	○	○	×	○	○

(○: 예, ×: 아니요)

(1)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사법 기관이다.'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이다. (2)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징이다. (3) '의결에서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행사할 수 있다.'는 총회의 특징이다. (4) '안건을 의결하려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 사법 재판소를 기준으로 모든 진술에 옳게 답하면 (1) ○, (2) ×, (3) ×, (4) ×이고, 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1) ×, (2) ×, (3) ○, (4) ×이며, 안전 보장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1) ×, (2) ○, (3) ×, (4) ○이다. ⑤ 무는 각 질문에 (1) ×, (2) ○, (3) ×, (4) ○로 답함으로써 안전 보장 이사회를 기준으로 모든 진술에 옳게 답하였다.

527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UN)의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다. ㄴ.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문서 형식으로 맺는 합의이다.

바로알기 |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직접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528 ②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을 무력 대신 협상, 중재, 재판 등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④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게 공통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⑤ 국제 사회에는 국내 사회와 달리 일률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① 국제법에는 조약처럼 원칙적으로 당사국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규범도 있으므로, 모든 국제법이 국제 사회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29 **모범 답안** 국제 관습법의 사례에는 외교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이 있다.

530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⑤ 법의 일반 원칙은 성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목적이나 사회의 정의, 형평에 비추어 모든 법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이 굳어져 법의 효력을 지닌 규범이다. 조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이다.

531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한 것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국제법의 법원이다. ㄹ. 법의 일반 원칙, 국제 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바로알기 | ㄱ.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식을 지니는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이다. ㄷ.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 사례이다.

532 B만 '예', 조약과 C는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함

조약

구분	A	B	C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합의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가)	아니요	예	아니요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합의인 A는 조약이고, B와 C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ㄴ. 조약은 협약, 협정, 헌장, 의정서, 규정, 규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ㄷ.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지속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한 규범이므로, B가 국제 관습법이라면 (가)에 '반복적으로 지켜 온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만들어진 규범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ㄱ. 조약은 당사자가 셋 이상이어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셋 이상인 조약을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

533 ④ 제시된 사례에서 중재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상황은 여전히 군사력과 현장 통제력에 좌우되고 있다. 이는 중재 판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534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비상업성, 비폭력성, 비정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국제 비정부 기구(INGO)이다.

535 **모범 답안** (가)는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나)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536 ㄱ.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총회나 사무국 등의 공식적인 조직과 헌장이나 규약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 ㄹ.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의 역할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ㄴ.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성, 비폭력성, 비정파성을 특징으로 한다. ㄷ.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제 연합(UN) 등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와 협력·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537 ④ ㉠은 특정 분야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 기구이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국제 통화·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적 기구이다. ㉡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제 비정부 기구(INGO)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전 세계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 개념 보충

국제기구의 구분

정부 간 기구	지리적 범위	범세계적 기구 예 국제 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 등
		지역적 기구 예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
	기능적 범위	포괄적 기구 예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등
		전문적 기구 예 세계 무역 기구(WTO), 세계 보건 기구(WHO) 등
비정부 기구	국제 앰네스티,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538 ㉠은 조약, ㉡은 국제 비정부 기구(INGO)이다. ㄱ. 조약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 ㄷ.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바로알기 | ㄴ.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ㄹ.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캠페인, 여론 형성, 감시 활동,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5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사회의 갈등

개념 확인 문제 110쪽

539 분단국가 540 일본 541 외교 542 자원 민족주의
543 국제 조정 544 중국 545 제조업 546 공공 외교
54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548 법적 해결

난이도별 필수 기출 110~115쪽

549 ① 550 ④ 551 해설 참조 552 ① 553 ③
554 해설 참조 555 ② 556 ⑤ 557 ②
558 공공 외교 559 ② 560 ③ 561 ② 562 ⑤
563 ⑤ 564 ② 565 국제 갈등 566 ④ 567 ⑤
568 ⑤ 569 자원 민족주의 570 ② 571 ③
572 해설 참조 573 ⑤ 574 ② 575 ③ 576 ⑤
577 세계시민 578 ②

549 ㄱ.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ㄴ.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반도국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바로알기 | ㄷ. 그림만으로 남북 관계가 안정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ㄹ. 그림에 역사적 갈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0 ㄱ, ㄷ, ㄹ. 일본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알기 | 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51 모범 답안 안정적인 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타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552 ②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로, 자원 갈등에 해당한다. ③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7광구를 각각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개발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도 개발을 이어 가지 못하였다. ④ 공동 개발 구역을 설정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자원·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7광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동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7광구 개발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사안이다.

553 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무역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병.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바로알기 | 갑.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남북 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정.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며 우리나라와 역사 갈등을 빚고 있다. 무. 역사 갈등 및 왜곡 문제는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554 모범 답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555 ㄱ.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로알기 | 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ㄷ.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미국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556 ① 근대 이전 우리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였다. ② 1950년대 우리나라는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③ 1970년대에는 냉전이 완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④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바로알기 | 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557 ① 오늘날에는 국가 간 공식 외교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공공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③, ④ 과거에는 외교를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나 외교관의 대외 활동 등 정부 중심의 공식적 활동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 등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도 국가의 대외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면 외교의 범주에 포함한다. ⑤ 외교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수행하는 대외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② 오늘날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문화 등도 외교 활동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558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외교 활동은 공공 외교이다. 공공 외교는 정부 간 소통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외교와 달리 다양한 수단과 통로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559 ㄱ. 정무 외교는 국가 안보와 정치적 관계를, 경제 외교는 무역·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각각의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다. ㄹ.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물리적·강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하드 파워와 달리, 문화나 가치 등의 매력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다.
바로알기 | ㄴ. 정무 외교와 경제 외교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무 외교가 경제 외교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ㄷ. 국가 안보를 위해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560 ① 제시된 단체의 활동은 정부가 아닌 시민 사회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에 해당한다. ②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한국 관련 기사 공유 등의 활동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가 지닌 매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프트 파워를 수단으로 하는 외교 방식이다. ④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활동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와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⑤ 지식 나눔, 인터뷰, 한국어 교육 등은 모두 외국인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로알기 | ③ 제시된 단체는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지식 나눔 등을 통해 외국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561

질문	A	B
외교관이 외교 활동의 주요 주체입니까?	예	아니요
소프트 파워를 주요 수단으로 외교 목적을 달성합니까?	아니요	㉠→예
(가)	예	예

전통적 외교와 공공 외교를 포괄하는 외교의 일반적 특징이 들어가야 함

A 전통적 외교, B 공공 외교이다. ㄱ. 공공 외교는 국가가 지닌 매력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므로 ㉠에는 '예'가 들어간다. ㄷ. 공공 외교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알기 | ㄴ. 전통적 외교는 주로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상대국과 자국의 국민까지 외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공 외교이다. ㄹ. (가) 질문에 A와 B 모두 '예'로 답하므로, (가)에는 전통적 외교와 공공 외교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외교의 일반적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 활동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562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외교 활동은 공공 외교이다. ⑤ 공공 외교는 문화 등 무형 자산의 매력을 활용하여 외국 국민의 자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공공 외교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공 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563 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산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산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위에 따른 외교 과제로 보기 어렵다.

564 ② 오늘날의 외교는 대통령과 외교관 중심의 전통적 외교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외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오늘날 외교는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외교 과제는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면서 국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④ 국제 문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65 국제 갈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결이 어렵고, 강제력을 지닌 중앙 정부가 없어 대립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566 ㄴ. 전쟁은 국가 간 또는 집단 간 무력을 사용하여 벌이는 충돌로, 국제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ㄹ. 무역 제재, 경제 봉쇄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상대국에 손실을 주거나 압박하는 것은 경제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갈등 상대국의 굴복이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쟁이다. ㄷ. 외교 관계 단교 위협은 외교적 갈등 사례에 해당한다.

567 ⑤ 이념과 체제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된 냉전 시기의 국제 갈등에 비해 현대 사회의 국제 갈등은 경제·기술·자원·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영역과 쟁점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미·중 무역 갈등은 현대 사회의 경제·기술 패권 경쟁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냉전 시기의 국제 갈등은 주로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대립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민족·종교 갈등은 주로 탈냉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③ 현대 사회에서 국제 갈등은 군사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④ 냉전 시기의 국제 갈등과 현대 사회의 국제 갈등 모두 국가 간 대립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

568 ⑤ 벨기에는 식민 통치 과정에서 투치족을 우대하고 후투족을 차별하여 내부 분열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분열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종족 간 대립과 내전으로 이어졌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 제시된 르완다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569 자원 민족주의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외 정책이다.

570 ㄱ, ㄷ. 시에라리온에서는 내전이 발생한 이후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의 채굴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면서 내전이 장기화되었고, 정부군과 반군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무기를 구매하여 내전을 지속하였다.

바로알기 | ㄴ. 주변국이 내전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시에라리온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벌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ㄹ.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무기를 구매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여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71 ③ (가)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영토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영토 갈등에 해당한다. (나) 리튬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특정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다. 생산국들의 국유화 조치로 리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는 희소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갈등에 해당한다.

572 **모범 답안** 자원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 간에 자원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573 ㉠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종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종교적 배타성과 근본주의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교 간 대립을 심화시켜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 종교 분쟁은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 영토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바로알기 | ㉤ 종교 갈등은 종교적 신념과 정체성이 깊이 결부되어 있어 타협이나 중재가 쉽지 않다. 또한 민족, 문화, 영토 문제 등 다른 갈등 요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화되거나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74 ①, ③, ④, ⑤ 국제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② 전쟁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국제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575 제시된 사례는 카스피해 연안국들이 군사적 충돌 없이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개발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이는 외교적 해결에 해당한다. ③ 외교적 해결은 분쟁 당사국이 직접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바로알기 | ① 외교적 해결은 당사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신속한 해결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협약은 분쟁 당사국 간 권리와 의무, 행동 원칙 등을 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분쟁과 무관한 제3자가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에 해당한다. 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국제기구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국의 자발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576 ⑤ 오늘날의 국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세계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바로알기 | ① 국제 문제는 기후변화, 감염병, 빈곤, 난민, 환경 오염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②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과 협력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국제 문제는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보다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동의와 국제 규범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이나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도 한다.

577 제시된 자료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해당한다.

578 ①, ③, ④, ⑤ 세계시민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② 세계시민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자국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거나 우열을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세계시민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13~15강 | 116~119쪽

579 ③	580 ③	581 ⑤	582 ②	583 ④
584 ④	585 ④	586 ④	587 ①	588 ④
589 ②	590 ③	591 ②	592 ③	593 ①
594 ④				

579 ㄷ, ㄹ. 제시된 글에는 A국이 다른 주권 국가인 B국과 C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강대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A국의 군사 행동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분쟁을 강제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제시된 글에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ㄴ. 제시된 글에 A국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내세우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580 제시된 자료는 국제 협력의 사례이다. ③ 국제 협력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국제 관계 유형이다.

바로알기 | ① 외교적 단절이나 무력 분쟁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다. ② 각국이 자국의 목표를 먼저 달성하기 위해 다투는 것은 국제 경쟁에 해당한다. ④, ⑤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의 관점과 국가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 주체로 보는 관점은 모두 현실주의와 관련이 있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협력보다 경쟁과 갈등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

581 ① 베스트팔렌 조약(1648) 체결을 계기로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② 트루먼 독트린(1947) 발표는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봉쇄 정책을 공식화한 것으로, 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의 자주국방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닉슨 독트린(1969)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등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기여하였다. ④ 미국과 소련의 두 정상이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 개혁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몰타 선언(1989)은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알기 | ⑤ 몰타 선언 이후에도 민족 분쟁, 종교 갈등, 영토 분쟁 등 다양한 국제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 개념 보충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베스트팔렌 조약(1648)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가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됨
트루먼 독트린(1947)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함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의 자주국방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
몰타 선언(1989)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냉전 종식에 뜻을 같이하며,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확인함

582 (가)는 냉전 체제 형성 시기, (나)는 냉전 완화 시기, (다)는 탈냉전 시기이다. ㄱ. (가)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결성된 시기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었다. ㄷ. (다)는 동유럽의 민주화,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이 이루어진 시기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이념적 대립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바로알기 | ㄴ. (나)는 닉슨 독트린 발표와 미국·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제3세계의 부상과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ㄹ.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5년에 창설되었다. 따라서 (나)와 (다) 사이가 아닌 (가) 이전에 창설되었다.

583 제시된 자료는 국제 사회를 중앙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인식하면서도, 국가 간 반복적인 상호 작용과 국제기구, 국제법 등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1) 자유주의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과 협력을 강조한다. (2)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3)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신뢰하며,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을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4) 자유주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국제기구를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1)은 ×, (2)는 ○, (3)은 ○, (4)는 ×가 옳은 대답이므로, 네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학생은 '정'이다.

584

후퇴 ← −3 −2 −1 [0] +1 +2 +3 → 전진
출발점

- 교사: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 학생: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1점
- 교사: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요? → 국가
- 학생: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입니다. → −1점
- 교사: 세력 균형 정책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 +1점
- 교사: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 관계를 어떤 상태로 전제하나요?
- 학생: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이 힘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로 봅니다. → +1점
- 교사: 자유주의 관점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 학생: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켜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 −1점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국제 레짐과 국제기구, 국제법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1)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 반면 자유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1)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 정책을 통해 어느 한 국가의 패권을 견제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1) 현실주의는 홉스의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국가 간 관계를 힘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로 이해한다.(+1)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1) 따라서 학생은 3번 전진, 2번 후퇴하여 현재 +1에 위치한다.

585 ㄱ. 전통적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영토 보전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ㄴ. 인간 안보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 존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안보 문제로 본다. ㄷ. 인간 안보는 빈곤,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에너지 위기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비군사적 문제까지 안보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바로알기 | ㄹ. 전통적 안보는 국가를, 인간 안보는 개인을 핵심 안보 대상으로 설정한다.

✓ 개념 보충

안보 문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강화 시도로 인해 과도한 군비 경쟁이 발생함
최근	• 민족·인종·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하는 전쟁과 테러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함 • 인간 안보: 개인을 안보 대상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안보 이외에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안보의 대상이 됨

586 ④ 국제 연합(UN)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고자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이므로,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환경 문제의 영향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제시된 사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 줄 뿐, 각국이 경제 성장을 늦추고 있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③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를 근거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87 ㄱ. 남북문제는 북반구의 선진국과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자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원 마련을 둘러싼 남북문제를 보여 준다. ㄴ. 기후변화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연합(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ㄷ.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주요 개발 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재원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이 감축과 재정 지원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 도상국이다.

588 (가) 총회, (나) 안전 보장 이사회, (다)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총회는 국제 연합(UN)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행사한다.

바로알기 | ①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만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이나 국제기구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실질 사항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 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의결된다.

589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실질 사항은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의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 ③ 국제 연합(UN)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권고할 수 있지만, 그 결의는 대부분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 사항을 회원국에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국제 연합(UN)은 독자적인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평화 유지군(PKO)의 파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국제 연합(UN)의 운영 경비는 회원국이 분담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 연합(UN)의 재정이 악화되어 국제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 등 각종 사업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분쟁 당사국이 평화 유지군(PKO) 파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아니라 ㉢과 관련된 사례이다.

590 첫 번째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두 번째는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로, 두 내용 모두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ㄴ, ㄷ.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 국가들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성립한 국제법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과 함께 국제 관습법을 재판의 주요 준거로 활용한다.
바로알기 | ㄱ.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여 성문화한 것은 조약이다. ㄹ.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591 ②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체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이 (가)에 들어가면 A는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바로알기 | ①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의 준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질문에 A~C 모두 '예'로 답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명시적 절차를 거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조약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예' 1개(조약), '아니요' 2개(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가 되어야 하므로 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국제기구도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약이다.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체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예' 1개(조약), '아니요' 2개(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가 되어 표가 성립하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⑤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A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592 (가)는 국제 비정부 기구(INGO)이다. ㄴ.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 단체로, 해양 생태계 보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산 캠페인,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 운동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ㄷ. 국제 앰네스티는 대표적인 국제 인권 단체로,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로알기 | ㄱ. 국제 비정부 기구는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므로, 국가의 하위 기관으로서 국가와 상하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 과정에서 각국 정부나 기업과 협력하거나 다른 비정부 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ㄹ. '지역적 기구'와 '전문적 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IGO)를 분류하는 기준이므로, 국제 비정부 기구인 그린피스와 국제 앰네스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93 ①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급망,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와의 협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국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594 ④ 표를 보면 ODA/GNI 비율이 2020년 0.14%에서 2024년 0.21%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개발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여 국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무상 원조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 원조로, 우리나라 내 소득 격차 완화와는 무관하다. ②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는 모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 양쪽 모두에 대해 공여국의 지위에 있다. ③ 자료는 정부의 ODA 규모(무상·유상 원조)만을 보여 줄 뿐, 민간 기업의 국제 개발 협력 참여 여부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지는 보여 주지 않는다. 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21%로,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인 0.33%보다 낮다.

실전 대비 해설

실전 대비 Ⅰ. 시민 생활과 정치 1회 122~123쪽

595 ① 596 ② 597 정치적 평등의 원리 598 ④
599 ④ 600 ② 601 ④ 602 ③ 603 ①
604 ④ 605 해설 참조

595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①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므로, 국가 성립 이후의 정치 현상만 설명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과 질서 유지 활동까지 정치로 본다. 따라서 입법부의 법률 제정 활동 역시 정치로 본다. ③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학교, 기업, 노동조합,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 정치의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정치 활동만 정치로 인정하며,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유지 활동은 정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정치 활동과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의 정치 활동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⑤ 정치권력을 둘러싼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의 범위를 국가 밖의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까지 확대하여 이해한다.

☑ 개념 보충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

국가 현상설	• 정치를 국가 고유의 활동으로 한정함 • 전형적인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국가 형성 이전과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집단 현상설	• 정치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국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음

596 ② 제시된 사례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자,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들과 협의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입지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치의 기능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597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치적 기회와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598 A는 평등, B는 자유이다. ㄱ. 평등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과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ㄷ.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으로,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념은 상호 보완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ㄹ.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ㄴ. 자유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599 A는 간접 민주주의, B는 직접 민주주의이다. ㄴ. 간접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ㄹ. 간접 민주주의는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정치 형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접 민주주의는 '아니요', 직접 민주주의는 '예'로 답하게 되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따라서 ㉠과 ㉡에 모두 '예'가 들어가야 한다. ㄷ.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간접 민주주의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600 갑.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성 부족이나 국민 의사 왜곡 등의 한계를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보완하려는 민주주의 모델이다. 정. 숙의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는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바로알기 | 을. 엘리트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정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 사회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복지의 실현을 중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601 ㄱ. 시민들이 직접 민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첨을 통해 시민 스스로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ㄷ. 민회는 고대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공적 사안을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ㄹ.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공직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직을 맡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바로알기 | ㄴ. 아테네의 시민은 모든 성인을 의미하지 않았다. 성인 중에서도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602 제시된 사건들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 ③ 참정권 확대 운동은 노동자, 여성, 흑인 등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의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 ① 참정권 확대 운동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과는 관련이 없다. ② 참정권 확대 운동은 법치주의의 발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운동이 아니다. ④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의 보장 및 확대와 관련이 있다. ⑤ 민주 정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된 것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의 근대 시민 혁명이다.

✓ 개념 보충

민주 정치의 발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실현 → 민주주의의 기원 •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에서 제외되었음
근대 민주 정치	•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 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대의 민주주의가 확산됨 •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됨
현대 민주 정치	•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고, 대의제를 채택함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국민 자치, 입헌주의, 권력 분립 등의 원리를 채택함

603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① 로크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 민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대 정치사상가는 홉스이다. ③ 로크와 루소는 모두 국민 주권론에 따라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④ 로크와 루소는 모두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 점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다. ⑤ 로크와 루소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604 갑의 주장에 담긴 정치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유주의이고, 을의 주장에 담긴 정치사상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이다. 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한다. ㄹ.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국가가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보므로, 국가를 단순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ㄱ. 공공선의 실현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은 공동체주의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ㄷ.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은 자유주의이다.

605 **모범 답안** 다수결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의견은 없으며,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전 대비 Ⅰ. 시민 생활과 정치 2회 124~125쪽

606 ⑤ 607 ② 608 ④ 609 해설 참조 610 ③
611 ② 612 ④ 613 ③ 614 ③ 615 ③

606 갑의 관점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 을의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⑤ 두 관점 모두 국가 기관의 정치 활동인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정치를 국가 기관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 포함하여 이해하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적합하다. ③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국가의 정치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를 정치로 본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정치의 범주에 포함하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정치 행위 주체의 범위를 넓게 이해한다.

607 ② 두 사례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기능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모두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으로는 볼 수 없다.

608 ①, ②, ③, ⑤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는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 충분한 숙의와 토론, 다수결의 원리, 소수 의견 존중 등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원리가 포함된다.

바로알기 | ④ 입헌주의는 국가의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영위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

609 **모범 답안** A는 자유이고, B는 평등이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평등이 침해될 수 있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610 (가)에는 직접 민주 정치만의 특징이, (나)에는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의 공통점이, (다)에는 간접 민주 정치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ㄱ. 직접 민주 정치는 구성원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체 규모가 작고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실현하기 유리하다. 이는 직접 민주 정치만의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직접 민주 정치보다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이는 간접 민주 정치만의 특징이므로 (다)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는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의 공통점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611 (가)는 전자 민주주의, (나)는 숙의 민주주의, (다)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ㄱ.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쌍방향으로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다. ㄷ.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민주주의 모델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은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 시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호와 의견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 ㄹ. 전자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현대 민주주의 모델이다.

612

-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A, B를 구분할 수 없다. →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또는 근대 민주 정치
-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A, C를 구분할 수 없다. → 근대 민주 정치 또는 현대 민주 정치
- '대의제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B, C를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는 고대 아테네 또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또한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는 근대 또는 현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조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A는 근대 민주 정치이고, B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C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④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 반면, 근대와 현대에는 대의제가 민주 정치의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바로알기 | ① 근대 민주 정치는 재산과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참정권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②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입헌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나타났다.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이다. ③ 현대 민주 정치는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어 성별이나 재산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근대 민주 정치에서도 성별이나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반면,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B와 C의 시민권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613

A는 홉스, B는 루소, C는 로크이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다고 보아, 계약을 통해 주권을 국가에 일부 위임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홉스는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으며, 절대 군주제를 지지하였다. ② 루소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④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⑤ 로크는 간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개념 보충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구분	자연 상태	옹호하는 정치 형태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절대 군주제
로크	평화롭지만 개인의 권리(생명·자유·재산)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	간접 민주주의
루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사유 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발생	직접 민주주의

614

제시된 주장에 나타난 현대 정치사상은 공동체주의이다. 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기적 개인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 개인주의의 확산을 경계한다. ㄷ.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므로, 사회를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 ㄹ.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는 국가가 공동선과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615

ㄴ.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당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ㄷ. 숙의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로알기 | ㄱ. 숙의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우선하기보다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동등하게 검토해야 한다. ㄹ. 숙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 타당한 근거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검토하여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실전 대비 Ⅱ. 정치과정과 참여 1회 126~129쪽

616 ①	617 ④	618 신민형 정치 문화		619 ④
620 ③	621 ②	622 ①	623 ②	624 ②
625 ③	626 해설 참조	627 ④	628 소선거구제	
629 ②	630 ④	631 ⑤	632 ④	633 ⑤
634 ⑤	635 ⑤	636 ③	637 ④	

616

갑. 정치과정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집약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익과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 을. 시민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고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바로알기 | 병. 정치과정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차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정치 체계에 투입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정. 정치과정은 정책 결정권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과 다양한 정치 주체의 요구와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617

(가)는 투입, (나)는 산출이다. ㄱ, ㄴ. 정당이 국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요구한 것과 시민 단체가 학교 교육 관련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치적 요구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한 것이므로 정치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ㄷ. 지방 의회에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정책 결정 기구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정치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ㄹ. 이익 집단이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 정책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정치 체계에 전달되는 것으로, 정치과정에서 환류에 해당한다.

618

제시된 사례에서 국민들은 지방 자치나 시민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참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신민형 정치 문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619

(가)에는 시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순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ㄱ. 시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정치 부패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ㄷ. 시민의 정치 참여는 공공 문제 해결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바로알기 | ㄹ. 시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620 제시된 사례는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①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국민이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정치의 객체로 전락할 수 있다. ②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약화되어 공직자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④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국민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정책 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⑤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약화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
바로알기 | ③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약화되므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국민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621 (가)는 정당이다. ㄱ.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자가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ㄷ. 정당은 국민에게 정치적 쟁점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알기 | ㄴ. 정당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권 획득을 추구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다. ㄹ.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이다.

622 갑국의 정당 체제는 양당제, 을국의 정당 체제는 다당제이다. ① 다당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 정당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정당 체제는 양당제이다. ③ 국민의 정당 선택 범위가 제한적인 정당 체제는 양당제이다. ④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이념과 입장을 대변하므로 각계각층의 이익이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기 쉽다. 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두 정당이 대립할 경우 다른 정당이 개입하여 중재나 조정을 할 수 있다.

623 ① 국민 참여 경선제는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국민 참여 경선제가 실시되면 정당 내부에서의 활동이나 경력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⑤ 후보자 선정에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원만 참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국민 참여 경선제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므로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624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이다. ㄱ.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투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바로알기 | ㄴ.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 및 감시함으로써 정치권력을 견제한다.

625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므로 C는 정당이고, ㉡은 '예'이다. 따라서 A, B는 각각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중 하나이고, ㉠은 '아니요'이다. ③ 정당은 공직을 담당할 인물을 발굴 및 육성하고, 공천을 통해 선거 후보로 추천하여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바로알기 | 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② 활동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므로 (가)에는 제시된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⑤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이다. 따라서 (나)에는 제시된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626 **모범 답안** 언론, 시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때 언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627 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매우 큰 경우와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더 많은 표를 부여하는 경우 모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ㄹ.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할 경우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드러나게 되므로, 비밀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바로알기 | ㄱ. 여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남성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ㄷ. 유권자가 대리인에게 자신의 투표를 대신하도록 위임하는 대리 투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투표 방식이다.

628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의 범위가 비교적 작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고, 선거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사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에 따른 과소 대표나 과대 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29 A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B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갑.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병.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다당제가 형성되기 쉽다.
바로알기 | 을.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보다 일반적으로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다. 정.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보다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630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비례 대표제이다.

따라서 A는 절대다수 대표제, B는 비례 대표제, C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ㄱ. 절대다수 대표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ㄴ. 절대다수 대표제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으므로, 지지 기반이 약한 군소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기 어렵다. 반면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군소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 대표제인 B는 절대다수 대표제인 A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ㄷ. 단순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를 바로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절대다수 대표제보다 선거 관리와 당선자 결정이 용이하다.

바로알기 | ㄹ.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나 절대다수 대표제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비례성이 높다.

631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50개의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씩 선출되므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자료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수	51	37	7	5	100
비례 대표 의석수	20	14	13	3	50
총의석수	71	51	20	8	150

⑤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므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인 간 득표수가 다를 경우 유권자 표의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므로, 1인 2표를 행사한다. ② 지역구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를 1인만 공천하였다면 A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1인 이상 공천하였으므로 중·대선거구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올 수 있었다. ③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1%, 총의석률은 47.3%, D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 총의석률은 5.3%이다. 따라서 A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총의석률보다 높지만 D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총의석률보다 낮다. ④ 총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의 격차가 가장 작은 당은 D당이다.

632 ㄴ. 우리나라 국회 지역구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ㄹ. 국회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ㄷ. 국회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의원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모두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시행된다.

633 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통해 공직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선거 운동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누구에게나 입후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선거 공영제는 선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선거 비용 보전과 후보자의 전문성은 관련이 없다. ③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선거구 법정주의이다. ④ 선거 비용 보전과 선거권자의 성실한 투표 참여 장려는 관련이 없다.

634 ⑤ 갑은 미디어가 정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을은 미디어가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미디어가 시민의 정치적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갑은 미디어가 정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② 을은 미디어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디어를 정책 결정 주체로 보지는 않았다. ③ 병은 미디어가 사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권력 감시 기능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④ 병은 미디어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문제를 지적할 뿐, 보도할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기능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635 제시된 글은 언론사가 여러 기사 가운데 보도할 내용을 선별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⑤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언론사의 편집 과정에서 취사선택을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은 언론 보도가 취사선택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언론 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 보도에 개입하거나 보도 지침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③ 언론 기관은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지만, 제시된 글은 보도의 신속성이나 정확성보다 보도 내용이 취사선택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지만, 제시된 글은 편집권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636 제시된 글은 일부 후보자가 가짜 뉴스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면서 유권자들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③ 선거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후보자를 판단하게 되어 대표자 선택 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바로알기 | ① 가짜 뉴스의 확산은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하여 투표율을 낮출 수 있다. ②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유권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④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짜 뉴스의 확산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간 토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637 ㄴ.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나 의견을 선호하여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ㄹ.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져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갈등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ㄷ.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거나 기존의 판단을 수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638 ④	639 ①	640 ③	641 ②	642 ⑤
643 ④	644 ④	645 ④	646 ⑤	647 ②
648 ③	649 ③	650 ③	651 ④	
652 결선 투표제		653 ①	654 ④	655 ④
656 해설 참조	657 ⑤	658 ③	659 ⑤	660 ②

638 ① 투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정치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요구와 지지를 전달하는 단계이므로 갑의 진술은 옳다. ② 시민 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나 이익 집단의 다양한 요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정치 체계에 전달하는 행위로서 투입의 사례이므로 을의 진술은 옳다. ③ 투입되는 요구의 양이 많거나 강도가 높고, 요구 전달 방법이 효과적일수록 정치 체계가 해당 요구에 주목하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병의 진술은 옳다. ⑤ 산출된 정책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를 가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요구가 다시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환류를 통해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으므로 무의 진술은 옳다.

바로알기 | ④ 산출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당의 당론 결정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으로 정치 체계의 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639 ㄱ. 투입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 체계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갑국은 투입이 활발하므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상향식 여론 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ㄷ. 갑국은 투입이 활발한 반면 을국은 투입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갑국이 을국보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을국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 체계에 전달되는 투입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정치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ㄹ. 을국은 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갑국보다 정책 결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산출이 원활하지 않은 갑국에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640 ③ 현대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다양해졌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⑤ 정치과정의 참여 주체가 다양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기 어렵다.

641 제시된 주장은 일반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만 선출하고, 이후의 정치는 선출된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을 비판하려면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ㄱ. 국민이 선거 이후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약화되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ㄷ.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뒤 이를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대중의 지나친 정치 참여가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시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ㄹ.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가 비합리적인 정치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제시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642 ⑤ 지역의 대표가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민의 요구에 정치 체계가 반응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정치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지방 정부와 의회의 기능에 관한 정치 지식을 묻는 질문이다. ② 지역 대표가 주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③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정치적 관용과 관련이 있다. ④ 지역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정치 참여 의향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참여 의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참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 효능감을 직접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643 ④ 정당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알기 | ①은 정치 사회화, ②는 정부의 조직과 견제, ③은 의회와 정부의 매개, ⑤는 여론의 형성과 조직으로, 모두 정당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당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644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므로 B는 다당제, A는 양당제이다. ④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

바로알기 | ①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은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크다. 따라서 (가)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들어갈 수 없다. ② 양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다당제보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유리하다. ③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은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크다. 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두 정당이 대립할 경우 다른 정당이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이 대립할 경우 중재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645 (가)는 전체 당원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나)는 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천 심사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④ (가)는 전체 당원이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므로, 당 대표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나)보다 당원의 의사가 후보자 선출에 직접 반영되어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가)는 전체 당원의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약할 수 있다. ② (나)는 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정당의 관료제화를 예방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는 일반 국민이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후보자의 인지도나 대중적 선호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인물 중심의 후보자 선출 경향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다)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므로, 당원만 참여하는 (가)보다 당원의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646 ⑤ 제시된 사례에서 이익 집단인 프랑스 정유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간 결과 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국민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특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이익 집단의 활동은 특정 정당의 집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하며, 제시된 사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반정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시된 사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익 집단이 반드시 소수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사례에도 소수 활동가 중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익 집단의 활동은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례에도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647 (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적 정치 참여, (나)는 시민 단체를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이다. ㄱ. (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ㄷ.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시민 단체가 정부의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가)는 시민이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일 뿐, 정책 결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ㄹ. (나)는 시민 단체를 통한 지속적·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반면, (가)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개인적 정치 참여로, 지속적인 참여인지는 알 수 없다.

648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이다. ㄴ, 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제시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하게 된다.

바로알기 | ㄱ. 시민 단체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49 ③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인 것은 이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사례는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비밀에 부치는 비밀 선거 원칙과는 관련 없다. ② 제시된 사례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과는 관련 없다. ④ 제시된 사례는 강요가 아닌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자유 선거 원칙과는 관련 없다. ⑤ 제시된 사례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 원칙과는 관련 없다.

650 ③ 제시된 사례에서 갑국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였으나, 을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부와 정치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지하거나 심판함으로써 선거가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므로,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거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④ 선거는 다양한 정치 참여 집단의 요구와 입장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651 밑줄 친 '이것'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ㄴ.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비례 대표 후보자의 명부와 순위를 미리 정하므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ㄹ. 제시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는 정당이 후보자의 명부 순위를 미리 정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므로, 유권자가 개별 당선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바로알기 | ㄱ. 비례 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여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당 간 의견 대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ㄷ.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한 편이다.

652 절대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으로,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결선 투표제이다.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2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가 있어 선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653 제시된 자료는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에서 지역구 의원 200석과 비례 대표 의원 100석이 정당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 준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례 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A당에 55석, B당에 35석, C당에 5석, D당에 5석이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된다. 갑국의 현재 의회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원 의석수	110	70	10	10	200
비례 대표 의석수	55	35	5	5	100
총의석수	165	105	15	15	300

ㄱ. 현재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ㄴ.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며, 이 표가 지역구 의원 선출과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모두 활용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한다.

바로알기 | ㄷ. 갑국은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선거구 수가 같으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률과 비례 대표 의석률이 일치한다.

654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제도를 개편했을 때 갑국의 의회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원 의석수	110	70	10	10	200
비례 대표 의석수	40	35	15	10	100
총의석수	150	105	25	20	300

④ A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안정적인 내각 구성을 위해 다른 정당과 연립할 수 있다. 이 경우 C당 또는 D당에도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한 정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내각 구성을 위해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내각을 구성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여러 정당에 분산되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⑤ A당의 의석수는 165석에서 150석으로 15석 감소한 반면, C당의 의석수는 15석에서 25석으로 10석 증가한다.

655 A는 선거 공영제, B는 선거구 법정주의, C는 선거 관리 위원회이다. ㄱ. 선거 공영제는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한다. ㄷ.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인구수,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ㄹ.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 등에 종속되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ㄴ. 우리나라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656 모범 답안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 획정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657 (가)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므로 전통적 미디어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포함하므로 뉴 미디어이다. ⑤ 뉴 미디어는 이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세분화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전통적 미디어는 정보가 주로 일방향으로 전달된다. ② 뉴 미디어는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전달할 수 있다. ③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민은 정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경계가 약화되었다. ④ 뉴 미디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통적 미디어보다 이용 가능한 채널이 다양하다.

658 ③ 제시된 글은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직접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다. ② 미디어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접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미디어를 통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의 부패와 무능을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59 ㄷ. C 방송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공하므로 균형 잡힌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ㄹ.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특정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민은 모든 언론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알기 | ㄱ.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는 이유만으로 A 신문이 언론의 정치적 책임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ㄴ. 의제 설정은 특정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능이다. C 방송에서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므로 B 신문이 C 방송보다 의제 설정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660 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면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정보가 만들어진 목적을 파악하면 정보에 특정 관점이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정보에 담긴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면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다. ⑤ 여러 신뢰할 만한 출처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알기 | ②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전 대비 Ⅲ.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1회 134~136쪽

661 ① 662 ④ 663 해설 참조 664 ③ 665 ④
666 ⑤ 667 의회 해산권 668 ⑤ 669 ②
670 ④ 671 ④ 672 ② 673 해설 참조 674 ④
675 ③ 676 ②

661 ① 제시된 사례는 경찰이 정지 명령을 무시한 A 씨의 차량을 법에 따라 강제로 정지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④, ⑤ 국가 권력의 특징이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③ 국가 권력은 개별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662 ㄱ. ㉠에는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되었다고 보는 왕권신수설이, ㉡에는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ㄷ, ㄹ.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법률에 따라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바로알기 | ㄴ. 왕권신수설은 근대 이전 절대 군주제에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반면에 근대 이후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신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 사상이 확립되었다.

663 모범 답안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등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

664 의회 의원에게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 형태 A는 대통령제이다. ③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다.
바로알기 | ①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견제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665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②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666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⑤ (가)에는 대통령제의 특징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은 '아니요', ㉡은 '예'이다. ②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③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과 관계없이 임기 동안 존속하는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는 내각이 의회와 국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통령제보다 책임 정치의 구현에 유리할 수 있다.

667 행정부 수반이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해산권이라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668 ⑤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으로,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반영된 해당 조항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므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②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는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 등으로 총리가 임기 중 물러날 수 있다. ④ 국무 회의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669 A는 국회이다.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진다.

바로알기 | ①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④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권은 감사원의 권한이다. 국회는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⑤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670 ㄱ.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ㄷ.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ㄹ.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권한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바로알기 | 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671 ④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672 제시된 사례는 ○○도와 △△시 사이에서 감사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②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 개념 보충

헌법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일반 법원에서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헌법 소원 심판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탄핵 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행정부의 청구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구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

673 모범 답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74 A는 대법원, B는 국회, C는 헌법재판소, D는 국무총리이다. ④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을 가진다.

바로알기 | ①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②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을 심판하는 것은 권한 쟁의 심판이다.

675 ③ 도지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도지사, 시장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단,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② ○○도지사는 광역 자치 단체장, △△시장은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④ 재의 요구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 의회 사이에서 행사된다. 따라서 △△시장은 △△시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시장과 △△시 의회는 각각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676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소환 제도, (다)는 주민 발안 제도이다. ②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은 지방 자치 단체장과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이다.

바로알기 | ① 해당 지역의 주민은 지방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 발안 제도는 지역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④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발안 제도는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⑤ 주민 소환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 발안 제도도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전 대비 Ⅲ.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2회 137~139쪽

677 ⑤ 678 A: 형식적 법치주의, B: 실질적 법치주의 679 ⑤
680 해설 참조 681 ① 682 ② 683 ⑤ 684 ④
685 ③ 686 ① 687 ⑤ 688 ③ 689 ①
690 ⑤ 691 ③ 692 ④

677 ①, ②, ③, ④ 국가 권력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강제력으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과 제도는 다른 사회 집단의 규칙보다 우선하며, 국가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을 집행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근대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였다. 반면, 근대 이후에는 사회 계약설의 등장과 함께 국민 주권의 원리가 확산되면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678 A는 절차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절차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679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의 통치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근거한 통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적 가치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절차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보다 헌법의 우위를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80 모범 답안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나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681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므로, 두 기관 간에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바로알기 |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④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각각 다른 인물이 담당한다.

682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을.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구성되므로, 의회 의원이 내각의 구성원을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여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알기 | 갑, 병, 정, 무가 설명한 내용은 모두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683 갑국은 정당이 2개뿐이고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없으므로, t+1 시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150석)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머지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⑤ 갑국은 200석이 과반이고 150석은 과반이 아니며 두 정당의 의석수가 같지 않으므로 총의석수는 301~399석이다. 을국은 150석이 과반이고 120석은 과반이 아니므로 총의석수는 240~299석이다. 따라서 총의석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바로알기 | 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t 시기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여대야소의 정국이다. ④ t+1 시기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684 ㄴ.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ㄹ.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 의원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ㄷ.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의회가 탄핵 소추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685 A는 대통령이다. 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국무 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ㄹ.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686 A는 감사원, B는 헌법재판소, (가)는 권한 쟁의 심판이다.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한다.
바로알기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③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④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구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687 ⑤ 국정 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권한으로, 국정 감사와 함께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는다. ③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상임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속하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교섭 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하는 단체로서, 의안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688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며, A는 헌법재판소이다. ㄷ.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ㄹ.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바로알기 | ㄱ. □□ 지방 법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만 필요하다.

689 A는 국회, B는 법원, C는 행정부이다. ①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탄핵의 대상에는 행정부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 ㉡, ㉢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③ '헌법 소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④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다. ⑤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

✓ 개념 보충

국가 기관 간 주요 견제 수단

국회	• 행정부 견제 수단: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대통령·국무총리 등 탄핵 소추권 • 법원 견제 수단: 국정 감사 및 조사권(판결 제외),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권, 법관 탄핵 소추권 • 헌법재판소 견제 수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소추권
행정부	• 국회 견제 수단: 법률안 거부권 • 법원 견제 수단: 사면권,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 헌법재판소 견제 수단: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법원	• 국회 견제 수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 행정부 견제 수단: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 헌법재판소 견제 수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지명권
헌법재판소	• 국회 견제 수단: 위헌 법률 심판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권,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권 • 행정부 견제 수단: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권, 대통령·국무총리·행정 각부의 장 등 탄핵 심판권 • 법원 견제 수단: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권

690 ⑤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은 지방 의회이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바로알기 | ① 조례에 관한 제·개정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으며, 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② 광역 자치 단체별로 선출하는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책임진다. ③ 교육감은 광역 자치 단체별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주민은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청구를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민 청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691 ③ 사례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 투표 제도에 해당한다.

692 ①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②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을 둘러싸고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⑤ 우리나라는 주민 투표 제도, 주민 발안 제도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바로알기 | ④ 지방 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가진다. 자치 입법권에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전 대비 Ⅳ. 국제 사회와 정치 1회 140~141쪽

693 ④ 694 ④ 695 ⑤ 696 ①
697 인간 안보 698 ④ 699 ③ 700 국제 사법 재판소
701 ① 702 ③

693 ④ 제시된 사례에서 각국은 자국의 어업 이익을 위해 충돌하지만,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면 결국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공동의 과제를 위해 협력하기도 하는 국제 사회의 특징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사례에는 국가 간 힘의 논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국제 사회에는 국가 간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국제 사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제시된 사례에서 강대국의 횡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 주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 주체이다.

694 ④ 제시된 연설문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이 발표한 '철의 장막' 연설의 일부이다. 이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이념과 체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바로알기 | ① 유럽 열강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 경쟁한 것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상황이다. ② 독일 통일(1990)과 소련 해체(1991)는 냉전

종식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1946년 철의 장막 연설이 발표된 시기의 일이 아니다. ③ 세계화 흐름의 후퇴나 상호 의존성 약화는 이 시기의 국제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⑤ 경제 대공황 이후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침략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배경에 해당한다.

695 ①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가 확립되었으며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유럽의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충돌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연합(UN)이 창설되었다. ④ 냉전 체제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였다.

바로알기 | ⑤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가 약화되었다.

696 (가)는 자유주의, (나)는 현실주의 관점이다. ① 자유주의 관점은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국제기구를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이다. ③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은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이다. ④ 현실주의 관점은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지만,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다.

개념 보충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	자유주의
전제	자국의 이익 우선	보편적 선 추구
입장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력 균형 정책으로 국제 평화 유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 유지
한계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 간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간과

697 인간 안보는 군사적 안보 이외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안보는 추상적인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을 안보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며,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 존엄을 위협하는 빈곤,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안보의 대상으로 삼는다.

698 ㄱ. 정부 간 국제기구(IGO)는 최소 3개 이상의 국가가 협약과 승인을 통해 구성한 조직체로,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ㄴ.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ㄷ.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바로알기 | ㄹ.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 비정부 기구도 활동 과정에서 국가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도 한다.

699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ㄷ. 총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바로알기 | ㄱ.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실질 사항에 관한 의결에서는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이사국이 동등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700 국제 연합(UN) 총회는 국제 연합(UN) 헌장 제96조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법률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은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이므로, 국가들의 행동과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701 갑.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면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을.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공적 개발 원조(ODA)를 받던 수원국이었으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어 2010년부터 주요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바로알기 | 병.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소련, 중국 등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를 추진하였다. 미국, 일본과는 그 이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정.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미국·일본 등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을 끊고 독자적으로 군사력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702 제시된 자료는 문화 교류를 통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공공 외교의 사례이다. ㄴ. 공공 외교는 문화와 가치, 정책 등에 대한 공감과 호감을 바탕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ㄷ. 공공 외교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호감을 높여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바로알기 | ㄱ. 공공 외교는 정부 외에도 개인,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지방 자치 단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외교 활동으로만 볼 수 없다. ㄹ. 상대국과의 협상은 전통적 외교의 주요 전략이다.

실전 대비 Ⅳ. 국제 사회와 정치 2회 142~143쪽

703 ① **704** ④ **705** 해설 참조 **706** ⑤ **707** ① **708** A: 조약, B: 국제 관습법 **709** ⑤ **710** ④ **711** ③

703 ① 제시된 사례는 아프리카 국경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 추구와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국제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 국제 사회의 특징이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704 ④ 제시된 자료는 1989년에 열린 몰타 회담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에서 (라) 시기에 있었던 몰타 회담은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705 **모범 답안**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706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A는 현실주의이므로, B는 자유주의이다. ㄴ.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 갑은 두 번째 진술에 '아니요'라고 답해 틀렸다. 갑이 2점을 받으려면 나머지 두 진술을 모두 맞혀야 하므로, ㉠은 첫 번째 진술의 정답인 '예'이고, (가)의 정답은 갑의 답변과 같은 '아니요'여야 한다. 을은 첫 번째 진술에 '아니요'라고 답해 틀렸고, (가)에도 '예'라고 답해 틀렸으므로, 1점을 받으려면 두 번째 진술에 '예'라고 답해 맞혀야 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예'이다. ㄹ. 현실주의는 국가 간 이익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요'인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현실주의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707 (가)에는 총회만 '예'로 분류할 수 있는 질문이, (나)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만 '예'로 분류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총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반면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안에서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총회는 국제 연합(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을 합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실질 사항을 의결할 때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의결 방식에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다.

708 국가나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인 A는 조약이고, 국제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한 B는 국제 관습법이다.

709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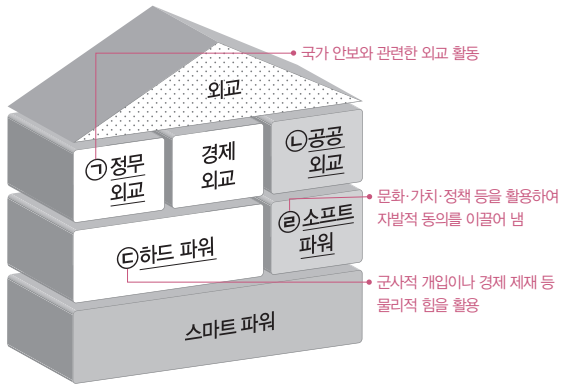
바로알기 | ①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국제 관습법은 개별 국가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가들이 법적 의무라는 인식 아래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된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인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이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으로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을 구분할 수는 없다.

✓ 개념 보충

국제법의 법원(法源)

조약	문서 형식으로 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
국제 관습법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굳어져 법의 효력을 지닌 규범
법의 일반 원칙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 원칙

710



ㄱ. 정무 외교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외교 활동으로, 경제 외교와 함께 전통적 외교에 해당한다. ㄴ. 공공 외교는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자국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ㄷ.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경제력 같은 강제적 힘이 아니라 국가가 지닌 매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어 외교 목적을 달성하는 힘이다.

바로알기 | ㄹ. 오늘날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결합한 스마트 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711 ①, ②, ④, 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며, 국제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③ 제시된 사례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MEMO

MEMO